예산춘추

BUDGET & POLICY

2026 | 네 번째(11월) | VOL. 84



특집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분석 내용
2027년도 국세수입 전망
2027년 경제전망

현안 진단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미래대응기금의 전략적 자산화를 위한 제언
경상수지 흑자 4,000억달러 시대의 해외투자

WORK & REPORT

예산정책자문위원 기고
OECD 국가 재정·경제 동향
NABOSTATS의 주요 통계 소개
NABO 발간보고서 소개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FISCAL STORY

경제 용어 사전: 이월·불용·세계잉여금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과 새로운 소비경제
유로화 출범과 글로벌 통화질서의 변화
숏폼 드라마의 경제학과 정책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contents

2026 Vol. 84

「예산춘추」에 수록된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PRINTED WITH SOY INK

친환경 국회 실천을 위해 친환경 종이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했으며,
재활용이 쉽도록 표지 코팅과 후가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집

대한민국의 다음 20년을 준비하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06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국민 예산 국민의힘이 지키겠습니다 14
유상범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분석 내용 22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2027년도 국세수입 전망 32
한석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2027년 경제전망 40
정지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현안 진단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52
김영주 한국은행 거시전망부장

미래대응기금의 전략적 자산화를 위한 제언: 아일랜드 등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58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경상수지 흑자 4,000억달러 시대의 해외투자 66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외환분석부장





발행일 2026년 11월 18일(통권 84호) **발행인** 이신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집위원회 위원장 정석배 기획관리관
위 원 김형진 총무담당관 박애린 정책총괄담당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신애 추계세제총괄과장 박연서 세제분석1과장 박미정 경제분석총괄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강영옥 홍보·공보담당 유민호 예산분석관 장설희 추계세제분석관 황진솔 경제분석관
간 사 김형진 기획예산담당관
편 집 황록연 주무관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6788-4619 02-6788-4686 www.nabo.go.kr www.instagram.com/nabokorea

WORK & REPORT

예산정책자문위원 기고: AI 대전환과 재정 패러다임의 변화 74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예산정책자문위원장

OECD 국가 재정·경제 동향: 프랑스 재정건전화의 딜레마와 한국 재정에 대한 시사점 78
황영준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NABOSTATS의 주요 통계 소개: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읽는 경제통계 80
노현정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NABO 발간보고서 소개 84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101

NABO 소식 104

FISCAL STORY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제 용어 사전: 이월·불용·세계잉여금 108

풀어쓰는 최신 트렌드 경제: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과 새로운 소비경제 110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언론학(경제저널리즘) 박사

세계 경제를 바꾼 역사적 사건: 유로화 출범과 글로벌 통화질서의 변화 114
임성택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대중문화 속 재정·경제 이야기: 1분이 만드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 숏폼 드라마의 경제학과 정책 과제 118
김치호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특집

대한민국의 다음 20년을 준비하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06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국민 예산 국민의힘이 지키겠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14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분석 내용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22

2027년도 국세수입 전망
한석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32

2027년 경제전망
정지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40

대한민국의 다음 20년을 준비하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려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그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고르게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 성장동력 투자, 불평등·양극화 완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지역주도 성장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점검할 것이다.



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들어가며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예산으로 제시했다. AI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과 인재에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의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주요 방향이다. 국회의 예산심사는 이러한 방향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돼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와 AI 관련 수출, 설비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026년 3.3%, 2027년 2.8%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보다 각각 0.7%p, 0.3%p 상향한 수치다. 반도체 중심의 대외수요가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봤다.

KDI도 10월 경제동향에서 AI 관련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우리 경제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 개선의 효과가 가계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면서 소비 개선세는 여전히 완만한 것으로 진단했다. 수출과 첨단산업의 성과를 가계소득과 소비, 지역경제로 확산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성장잠재력 반등을 위한 재정전략

2027년 예산안은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산업과 기술, 인재와 지역에 어떤 우선순위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향후 성장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중요한 구조적 과제 가운데 하나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이다. KDI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현재 1%대 후반인 잠재성장률이 2030년 1%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2040년대에는 0%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성 개선 정도에 따라 장기 성장경로의 격차도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성장잠재력의 반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표 1 **시나리오별 잠재성장률 전망** (단위: %)

기간	비관	기준	낙관
2025~2030년	1.2	1.5	1.7
2031~2040년	0.4	0.7	1.1
2041~2050년	-0.3	0.1	0.5

자료 KDI,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2025.5.8.

혁신기업의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성장산업으로 인재와 자본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와 첨단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연구개발이 사업화와 수출로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는 제도개선과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고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분야에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 규모와 함께 재정투자가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지를 핵심 심사 기준으로 삼겠다.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0.9조원으로 편성됐다. 총수입은 880.8조원,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584.4조원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제시됐다. 또한 추가 세수를 미래투자와 재정안정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했다.

표 2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재정지표**

구분	2027년도 정부안	점검사항
총수입	880.8조원	세입 전망의 적정성
국세수입	584.4조원	반도체·기업실적 등 경기요인 의존도
총지출	820.9조원(전년 대비 +12.8%)	지출 확대의 우선순위와 효과성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0.1%	재정수지 개선의 지속가능성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48.3%	중장기 재정건전성
지출구조조정·의무지출 제도개편	107.6조원(재량지출 구조조정 38.6조원 + 의무지출 제도개편 69.0조원)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개편의 적정성
미래대응기금	전체 162.3조원 / 전략투자 45.4조원 / 국채 신규발행 축소 12.5조원 / 여유자금 104.4조원	기존 재정사업과의 역할 분담·연계, 미래투자 선정 기준·우선순위, 여유자금 운용·성과관리

자료 정부, 「2027년도 예산안」, 2026.9.1.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심사의 기준도 더 엄격해야 한다. 늘어난 재원이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제대로 배분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재정의 책임은 단순히 적게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더 큰 성장과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

우선 AI와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신속한 투자와 전략적 집중이 중요하다. 정부는 AI·3대 메가프로젝트에 21.3조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62.8조원을 편성했다. 인재 양성과 전력·용수,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 민간이 단독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기반은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 재정은 연구개발 성과를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하는 촉매가 되어야 한다. AI와 연구개발 예산은 단순한 집행 규모보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실증·사업화·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

사람에 대한 투자도 성장전략의 핵심이다. OECD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2.0달러로 미국(84.1달러)의 약 62% 수준이다. 2020년 불변 구매력평가(PPP) 달러 기준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된다.

인재정책은 학교교육과 청년 인재양성을 넘어 재직자와 중장년의 재교육·직무전환까지 생애 전반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취업자의 직장교육·단기과정 등 비형식 교육·훈련 참여율은 25~44세 16%, 45~64세 15%로 OECD 평균 52%, 45%에 크게 못 미친다. AI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성장산업과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 직무전환 교육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의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청년예산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교육·일자리·소득·주거·자립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43.3조원을 편성했다. 지원 규모뿐 아니라 예산 배분과 사업 설계가 이러한 전 주기 지원을 제대로 뒷받침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주거는 청년정책을 넘어 가계의 생활비 부담과 자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분야다. 정부는 주택공급에 33조원의 재원을 편성하고 공적주택 21만 8,000+α호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된 공급물량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원 배분과 사업 설계가 적정한지, 공급 지역과 주택 유형이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주택금융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 Jisoo Song / Shutterstock.com

지역주도 성장의 기반 강화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면 산업과 인재, 교통과 정주여건을 하나의 경제권 안에서 연결해야 한다. 정부는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에 33조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에 9.8조원을 편성했다.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은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 성장전략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높이는 데 있다. 정부도 지방우대 확대와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포괄보조 확대 등을 통해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심사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 산업·인재·교통·정주 관련 사업이 권역별 성장전략에 맞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철도와 광역교통망은 권역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다. 정부의 5극3특 전략도 초광역권 60분 교통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철도와 광역교통 투자가 수도권과의 연결뿐 아니라 지역 거점과 산업거점·대학·공항·항만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을 점검해야 한다. 사업 간 연계성과 추진체계도 함께 살펴보겠다.

표 3 **2027년도 예산안 주요 투자분야 및 심사 기준**

분야	주요 투자	주요 심사 기준
AI·미래성장	AI·3대 메가프로젝트 21.3조원, 미래 성장엔진 62.8조원	민간투자 유발, R&D→실증→ 사업화→수출, 핵심 인프라
청년·인재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43.3조원	교육→일자리→소득·주거→자립, 재교육·직무전환
주거	주택공급 재원 33조원, 공적주택 21.8만호+α	착공·입주 가능성, 공급 지역·주택 유형, 주거비 부담
SOC·교통망	국토부 SOC 21.1조원	거점 간 연결, 산업·대학·공항·항만 연계
지역주도 성장	국토대전환·지방주도 성장 33조원, 5극3특 성장엔진 9.8조원	산업·인재·교통·정주 연계, 지역 자율성과 성과책임
양극화 대응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 117.1조원	고용·소득·자립기반, 생활비 부담, 전달체계

주 주요 투자금액은 정책 분야별 분류에 따라 일부 포괄·중첩될 수 있음
자료 정부, 「2027년도 예산안」, 2026.9.1.

성장의 성과를 민생과 내수로 확산

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확산되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 기반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K자형 양극화 대응·모두의 성장’에 117.1조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농어민·취약노동자 민생안정과 적극복지, 사회연대경제 등 다양한 사업이 이 축에 포함돼 있다.

불평등은 소득의 차이에만 머물지 않는다.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자산형성, 지역에 따른 기회의 격차가 누적되면 다음 세대의 출발선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좋은 일자리와 자립기반을 넓히고, 주거·교육·돌봄 등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가계가 빚을 더 내 소비하는 구조가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주거·교육·돌봄 등 생활비 부담을 낮춰 가계의 소비여력을 높여야 한다.

예산심사에서는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도록 재원이 배분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민생예산이 취약계층 보호와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가계의 소비여력을 뒷받침하도록 사업이 설계되어 있는지도 함께 점검하겠다.

미래대응기금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미래대응기금은 이번 예산안에서 재정운용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 장치다. 미래대응기금 162.3조원 가운데 45.4조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12.5조원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하며, 나머지 104.4조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기존 일반회계 사업과의 역할 분담과 연계가 적절한지, 미래투자로 분류할 사업의 기준과 투자 우선순위는 타당한지, 여유자금은 어떤 원칙으로 운용할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이 전략적 투자와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취지를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와 국회의 심사·통제 체계도 점검하겠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중요한 심사 기준이다. 반도체 경기와 기업실적에 따른 세입 증가가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살피고, 고령화로 연금·의료·돌봄 등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중장기 재정관리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38.6조원과 의무지출 제도개편 69조원을 합한 107.6조원 규모이다. 이 중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겼는지, 제도개편의 내용과 방향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사업 종료나 회계상 조정에 그치지 않고, 저성과·중복사업과 정책환경 변화로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을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결산과 성과평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확인된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에 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국회의 예산심사는 단순히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과정이 아니다. 정부안에서 보완이 필요한 민생 수요와 미래투자를 면밀히 살피고, 재정투자가 실제 생산성과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생산성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늘어난 소득이 소비와 내수 회복으로 연결되며, 경제성장이 다시 재정여력을 확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쓸 곳에는 제대로 쓰고, 아낄 곳에서는 과감히 아껴야 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현재의 민생을 지키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필요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다음 20년을 준비하는 데 쓰이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국민 예산 국민의힘이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일시적 세수 증가에 기대어 820.9조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과 연례지출 확대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형해화하는 백지수표식 예산을 바로잡고, 성과평가가 결여된 비효율·중복 사업을 대폭 정비할 것이다. 또한 포퓰리즘성 현금 지원 사업을 걷어내고, 한정된 재원을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과 민생 고통 해소에 집중시킴으로써 국민의 예산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글. 유상범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2027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이번 정부예산안은 반도체 호황 등 일시적으로 급증한 대규모 세수 증가를 토대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것이다. 과연 이러한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편성된 것인가? 우리나라 예산사업은 이미 9,700개가 넘는 복잡하고 방대한 구조로, 중복·비효율 사업을 정비하고 성과평가와 환류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급증한 예산규모에 맞춰 사업들을 나눠 먹기식으로 편성하고,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다년도 연례지출에 투입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씨앗 이론'을 내세워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강조하지만, 한정된 재원이 잘못 배분되면 편익보다 비용이 큰 '화이트 엘리펀트(White Elephant)' 사업, 지방정부의 지출 확대를 유인하는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 공동재원의 비용 분산에 따른 '1/n 법칙'과 같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다음 다섯 가지 문제점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표 1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예산액	쟁점
820.9조원	2027년 예산안 규모 올해 본예산 대비 93조원↑(12.8%) 역대 최대 증가율
106조원	내년 늘어나는 나라빚(올해 1,413.8→1,519.8조원)
하루 1,107억원	내년 국고채 이자(연 40.4조원, 올해 34.4조원보다 17.4% 증가)
104.4조원	빚을 내는 한편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두는 돈
약 13.6조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사업비(30%)

첫째, 선진국들은 일시적으로 급증한 세수로 당장의 지출에 쓰지 않고 국가부채를 갚거나 기금 적립에 쓰는데 반해 우리나라 정부는 단기간에 모두 지출하는 정반대의 재정운용을 추진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스위스는 채무 브레이크(Debt Brake)를 통해 경기조정 세입에 맞춰 지출한도를 정하고 호황기의 흑자를 채무 축소에 활용한다. 호주는 2005~2006년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순부채를 해소하는 한편 미래기금에 재원을 적립하여 장래 공무원연금 부담에 대비했다. 아일랜드는 미래기금에 2024~2035년 매년 GDP의 0.8%를 적립하고 원칙적으로 2041년 이전에는 인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도는 다르지만 세수호황을 장래의 재정부담에 대비하는 재원으로 전환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 적자국채 100.1조원을 발행하면서 미래대응기금에 104.4조원을 적립하고, 조성 첫해부터 45.4조원의 사업비를 지출할 계획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를 연례사업에 투입하면, 피콕–와이즈먼(Peacock–Wiseman)의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 이론이 시사하듯 세수 감소 이후에도 확대된 지출을 축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 스스로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28년 1.5%에서 2030년 2.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인상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12.8% 확대하는 것은 물가와 금리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세수가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 증가하는데도 국채를 100조원 넘게 발행하면서, 기획예산처는 이를 '국채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정부만의 궤변일 뿐이다.

둘째, 이번 정부예산안은 국민의 돈을 백지수표식으로 위임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형해화하는 헌법 위반 예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재정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는 국회 의결 이후에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하겠다는 사업들이 적지 않다.

미래대응기금은 사업비의 30%인 약 13.6조원 상당을 국회 사전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는 총 6조원 규모의 계획으로 내년에 1조 5,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개별사업의 지원 여부와 규모, 기업 투자일정과 기반시설·연구개발·인력양성 간 연계계획이 불명확하다.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도 총액과 지원한도만 제시되어 있으며, '국민성장펀드'는 올해 재정출자금의 최종 투자집행이 지연된 상황에서도 내년에 1조원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

헌법 제54조 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한다. 사업의 대상과 내용, 단가와 물량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예산부터 의결하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 실질적인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킨다. 정부가 선호하는 총액배분 방식의 럼섬



(Lump-sum) 예산도 명확한 성과평가와 강력한 환류(Feedback) 체계가 작동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통제장치 없이 용도가 불명확한 예산을 확대하면 재정의 비효율과 낭비가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형해화하는 백지수표식 예산편성을 바로잡고 재정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셋째, 이번 정부예산안은 현재도 잡다한 예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반(反)개혁 예산이다.

정부예산은 명확한 정책목표에 따라 편성·집행하고, 성과를 평가해 다음 예산에 환류하는 재정순환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처별 점증주의 예산편성과 미흡한 성과관리로 세부사업이 9,700개를 넘었고, 이번 예산안은 급증한 지출규모에 맞춰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켰다.

미래대응기금은 세부사업 140개 중 성과관리 대상이 한 건도 없고, 미래 투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은 약 42%에 불과하다.[1] 채용장려금 사업은 보조금 없이도 채용했을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중효과(Deadweight Effect)의 우려가 있으며,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것과 실제 추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별개이다. AI·반도체 연구개발 예산도 한 해에 69% 증가했지만, 민간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연구개발까지 지원한다면 민간투자를 대체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할 수 있다.

1) 미래대응기금 사업지출 45.4조원의 구성: ①자본형성 14.8조(33%), ②인적자본 4.2조원(9%), ③경상이전·현금 바우처 9조원(20%), ④지방 일반재원·행정통합 7.4조원(16%), ⑤출자·융자·펀드 6.5조원(14%), ⑥기관 운영비 1.9조원(4%), ⑦지방 생활 SOC 1.6조원(4%) (한국재정학회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발제문 참조)

더욱 문제인 것은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성과평가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감액이나 개선을 요구받은 사업들이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증액되었다. '중소기업 재기지원'은 감액 평가에도 '랜드마크 사업 선정'을 이유로 834% 증액되었고, '모태조합출자'는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를 지적받고도 1.3조원(58.5% 증가)이 편성되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역시 낮은 취업성과를 지적받았지만 훈련인원은 줄이고 지원단가를 높여 예산을 15.7% 증액한 7,256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정책목표와 성과평가 없이 확대되는 사업을 전면 검토하고, 결산심사와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재정운용의 틀을 바로잡겠다.

넷째, 이번 정부의 예산사업에는 '모두의 지원'을 앞세운 포퓰리즘 예산사업들이 많은데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예산은 사회가 선택한 가치와 방향을 비추는 거울이다. 재정학자 살바토레 스키아보캄포(Salvatore Schiavo-Campo)의 예산론이 시사하듯, 예산은 누구를 지원하고 어떤 활동에 보상하며 미래세대에 어떠한 부담을 남기는지를 보여준다.[2)]

이번 예산안에는 '모두', '기본사회', '사회연대경제'라는 이름이 반복된다. 그러나 재원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사업을 무분별하게 늘리면 정작 절박한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자산 격차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민연



2) Salvatore Schiavo-Campo, 「Government Budgeting and Expenditure Management: Principles and International Practice」, 2017.



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재정부담을 고려하면, 한정된 재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모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청년미래적금'은 저축액에 비례해 기여금을 지급하면서 일반형의 소득요건을 폐지해 경제적 여력이 있는 청년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반면 '청년기회자금'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에게 원금 상환을 전제로 지원한다. '혼인지원금' 역시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모두에게 같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며, 어려운 계층에 더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

정부의 복지지원은 당면한 고통의 해소와 함께 자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 경제학자 야노시 코르나이(János Kornai)의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이론은 반복적인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가 수혜 조직의 효율성 제고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국민의힘은 지원의 절박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검증하고 통합·조정하겠다.

다섯째, 2027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문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감소에 대비하는 '저수지'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조성 첫해부터 45조 4,000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연례사업을 대거 추진하고 있다. 미래에 대비하려면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위기 등에 대응할 적립 원칙, 세수 감소 시 지출 조정 기준, 사업별 지원 종료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전망에서도 향후 추가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대책 없이 시작한 사업들은 향후 적자재정이

나 다른 지출의 축소에 의존할 우려가 크다.

둘째, 정부는 기금지출이 민간경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를 초래할 수 있다. 재정승수의 효과는 단순한 지출규모가 아니라 지출의 내용과 경제상황에 좌우된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의 투자영역에 직접 개입하고 부처별·지역별로 재원을 분산하면서 실제로 얼마나 추가적인 민간투자와 생산성을 창출하는지 검증하지 않았다.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이 지적하듯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인구조가 자원배분을 왜곡할 위험도 있다.

셋째, 미래대응기금은 기존 재정체계를 변경해 국회의 통제와 예산심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재정에 배분되던 내국세 연동 재원을 기금으로 전환하고, 9월 말 세수 재추계에 따른 초과세수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직접 전입하도록 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국가재정법」 제5조는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자금의 신축적 운용 필요성을 기금 설치 요건으로 정하고, 제14조는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 신축적 운용의 필요성,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 가능성, 기존 회계·기금 대비 효과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은 일반재원인 내국세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성격이 다른 광범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다.

국민의힘은 기금의 연도별 수입·지출과 여유자금, 세수 악화 시 대응계획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안정적인 재원대책 없는 지출 확대를 조정하고, 여유자금 104.4조원 중



상당분을 국채발행 축소와 국가채무 관리에 활용하며, 국회 사전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를 30%에서 크게 줄이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은 국민 예산을 국민의 힘으로 지키겠다. 특히 재정민주주의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지키고 재정의 편법 운용을 막아 진정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바꿔놓겠다. 2027년도 예산안 심의의 최우선 목표를 고물가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두겠다.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겠다. 예산 감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필요하고 중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다. 성과평가를 반영하지 않은 증액사업과 중복사업을 검증하고, 기금운용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겠다.

무엇보다 예산은 사회의 선택을 비추는 거울이다. '모두를 위한 예산'이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기보다 절박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여 국민의 당면한 고통을 해소하고 미래세대의 기회와 재정여력을 지키겠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요구하는 예산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책무를 다할 것이다.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분석 내용



2027년도 예산안은 국세수입이 전년 본예산 대비 194조 2,000억원(49.8%) 늘어나는 이례적인 세수 여건 속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고 수준인 12.8%로 편성하는 한편, 추세치를 웃도는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방식을 바꾸는 등 재정운용의 틀 자체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0.1%까지 축소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개선되나, 이는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와 명목성장률 증가 등에 따른 것이며, 국가보증채무 등 잠재적 재정위험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글.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들어가며

지난 9월 3일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재정운용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국정성과 창출형 재정체계 구축, 지방우대 원칙 확대와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 공정한 재정원칙 확립, 10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등 다섯 가지를 핵심 축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크게 늘어난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에 쓰고, 필요할 때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의 요지이다.

우리 재정은 지난 몇 년간 세수결손과 추경 편성이 반복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4% 수준에 머물렀고, 국가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섰다. 2027년도 예산안은 이와 같은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되는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개선이 세수의 일시적 급증에 기댄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금 신설과 교부세·교부금 산정방식 변경, 다수의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어 국회의 재정통제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어느 해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2027년도 예산안 개요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880조 8,000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205조 6,000억원(30.4%) 증가하였다. 이 중 국세수입은 584조 4,000억원으로 본예산(390조 2,000억원) 대비 194조 2,000억원(49.8%), 2026년 추경(415조 4,000억원) 대비로도 169조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다.

총지출은 820조 9,000억원으로 본예산(727조 9,000억원) 대비 93조원(12.8%) 증가하였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09년(10.6%)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505조원으로 4.9% 증가한 반면, 기금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으로 315조 8,000억원으로 28.2% 증가하여 기금이 총지출 증가를 주도하였다.

정부는 2027년 통합재정수지가 59조 9,000억원 흑자로 전환되고, 관리재정수지는 3조 1,000억원 적자(GDP 대비 △0.1%)로 전년 본예산(△3.9%)보다 3.8%p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1,519조 8,000억원으로 GDP 대비 48.3%를 기록하여 비율 기준으로는 전년 본예산(51.6%) 대비 3.3%p 하락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106조원 증가한다.

표 1 **2027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요약**

(단위: 조원, %, %p)

구분	2026 본예산(A)	2026 추경	2027 예산안(B)	B-A	(B-A)/A
총수입	675.2	700.6	880.8	205.6	30.4
- 국세수입	390.2	415.4	584.4	194.2	49.8
총지출	727.9	753.0	820.9	93.0	12.8
- 예산	481.4	504.0	505.0	23.7	4.9
- 기금	246.5	249.0	315.8	69.4	28.2
통합재정수지	△52.7	△52.5	59.9	112.6	-
관리재정수지	△107.8	△107.6	△3.1	104.7	-
(GDP 대비)	(△3.9)	(△3.8)	(△0.1)	(3.8)	-
국가채무	1,413.8	1,412.8	1,519.8	106.0	-
(GDP 대비)	(51.6)	(50.6)	(48.3)	(△3.3)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7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

표 2 **2027년도 예산안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조원, %)

구 분	2026 본예산(A)	2027 예산안(B)	증감 (B-A)	(B-A)/A
총지출	727.9	820.9	93.0	12.8
1. 보건·복지·고용	264.4	289.0	24.6	9.3
2. 교육	99.9	110.7	10.8	10.8
3. 문화·체육·관광	9.6	11.6	2.0	20.4
4. 환경	13.9	14.6	0.7	5.2
5. R&D	35.5	39.5	4.0	11.2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8	41.2	9.4	29.7
7. SOC	27.7	28.9	1.2	4.0
8. 농림·수산·식품	28.0	30.7	2.7	9.5
9. 국방	67.7	73.3	5.6	8.2
10. 외교·통일	7.0	7.1	0.1	1.1
11. 공공질서·안전	27.3	28.8	1.5	5.3
12. 일반·지방행정	121.4	149.0	27.6	22.8

주 1. 2026년은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2. 보건·복지·고용 및 국방 분야는 군인연금기금 이관 및 국방 분야 총지출 기준 개편 이후 기준으로, 종전 기준으로는 보건·복지·고용 269.1→293.9조원(9.2%), 국방 65.9→71.8조원(9.0%)

자료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7년도 예산안의 12대 분야별 재원배분을 2026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29.7%로 가장 높았고 일반·지방행정(22.8%)과 문화·체육·관광(20.4%)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전력 인프라, 지방미래성장지원금,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의 사업이 신설되거나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증가 규모로는 일반·지방행정 분야가 121조 4,000억원에서 149조원으로 27조 6,000억원 늘어 가장 컸다. 이어 보건·복지·고용이 264조 4,000억원에서 289조원으로 24조 6,000억원, 교육이 99조 9,000억원에서 110조 7,000억원으로 10조 8,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가 31조 8,000억원에서 41조 2,000억원으로 9조 4,000억원 증가하였다. 반면 외교·통일(1.1%), SOC(4.0%), 환경(5.2%) 분야는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12.8%)에 크게 못 미쳤는데, ODA와 도로개선·유지보수 예산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그 밖에 R&D는 35조 5,000억원에서 39조 5,000억원(11.2%), 농림·수산·식품은 28조원에서 30조 7,000억원(9.5%), 국방은 67조 7,000억원에서 73조 3,000억원(8.2%), 공공질서·안전은 27조 3,000억원에서 28조 8,000억원(5.3%)으로 늘었다.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재정건전성: 지표 개선의 지속가능성과 잠재적 재정위험

국회예산정책처는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정부 전망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관리재정수지는 2027년 GDP 대비 0.1% 흑자를 나타낸 후 2030년 2.3% 적자 수준에 이르고, 국가채무 비율은 2030년까지 42~4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 개선은 반도체 경기에 따른 명목GDP 증가 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정부 전망에서도 관리재정수지는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다시 악화되는 경로를 보인다는 점에서 2027년의 개선을 구조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채무 외의 재정부담 요인도 확대되고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한미전략투자채권 등의 발행 확대로 2030년 157조 3,000억원에 이르러 2026년의 약 5.7배로 늘어나고, 국가채무 이자부담은 2030년 53조 3,000억원으로 2026년보다 16조 7,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37개 공공기관의 부채도 2030년 997조 4,000억원으로 2026년보다 219조 1,000억원 증가하며, 민간부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부채는 2025년 기준 244.7%로 주요 28개국 중 14위 수준이다. 따라서 국가채무뿐 아니라 보증채무, 공공기관 부채, 민간부채 등을 포괄하는 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총지출이 12.8% 확대되는 데 따른 물가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26년 2.7%, 2027년 2.3%로 전망하고 있어 물가안

정목표(2%)를 웃도는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3.0%로 유지되는 여건에서 재정지출 확대로 총수요가 증가할 경우,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과 취약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분야별 재원배분: 중장기 재정수요에 대한 대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복지 의무지출이 2030년 256조 7,000억원으로 2026년보다 30.8% 증가할 전망이므로, 생계급여 기준 개선과 부정수급 차단 등을 통해 의무지출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근로와 연계된 생산적 복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분야는 유보통합, 노후 학교시설 개선, 특수교육 강화 등으로 재정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단계별 중장기 재정소요를 종합적으로 전망하여 재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환경 분야는 중기 연평균 증가율이 4.1%로 총지출 증가율(8.4%)의 절반 수준이고, 총지출 대비 비중도 1.9%에서 1.6%로 낮아질 전망이다. 환경 투자가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국방 분야는 처우개선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첨단전력 도입예산이 제약될 우려가 있으므로 AI 기반 기술개발과 유·무인복합체계 전력화를 중심으로 '병력집약'에서 '기술집약'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재난관리 부문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2030년까지 0.7%에 그치고 있어 폭염 등 복합재난에 대응한 전 주기 투자가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분석

미래대응기금은 「미래대응기금법」 제정과 「국가재정법」 등의 개정을 전제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되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치를 웃도는 추가세수 158조 5,000억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계정의 129개 사업에 45조 4,000억원을 지출하고, 103조 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표 3 미래대응기금 계정별 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계정	사업비	비중	주요 사업
청년계정	133,296	29.4	아동기본수당, 청년미래적금, 청년주택 등
성장동력계정	141,638	31.2	AI·반도체 인프라, 국민성장펀드 출자 등
지방계정	102,662	22.6	지방미래성장지원금, 통합지방정부 지원 등
교육·인재계정	76,029	16.8	지방 국립대 지원, 과학기술 인재양성 등
합계	453,625	100.0	

자료 기획예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분석 결과, 첫째, 추가세수는 일시적 재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으로는 추가세수가 2027년 167조 8,000억원, 2028년 71조 7,000억원 발생한 이후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4대 계정 사업비 중 순수 신규사업은 18조 9,0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8.4%는 기존 회계·기금에서 통폐합·분리되거나 다른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이어서 기존 재정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셋째, 아동기본수당 등 경직적 지출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에는 그 부담이 일반회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 넷째, 기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개별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심사가 분리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이 밖에도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이 기금으로 전출되면서 국가채무 감축 경로가 약화되고, 2026년 초과세수 56조 2,000억원을 전액 적립할 경우 지방교부세 정산과 채무상환이 생략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계정별 재원배분 기준과 최소 한도가 없고, 세입세출 외로 이루어지는 기금의 적립과 인출에 대한 결정권이 사실상 정부에 위임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성장동력계정은 대규모 장기투자 중심으로 운용하여 잠재성장률과 세수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청년계정은 기존 회계·기금으로 재이관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며, 지방·교육·인재계정은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보전재원

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채무상환 의무비율 상향 또는 우선 배분의 법제화, 적립·인출의 요건과 한도 및 계정별 배분 기준의 법률 명시, 주요 항목 자체변경한도의 하향 조정(30%→20%) 등 국회의 재정통제를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에 대한 분석

정부는 내국세가 추세치를 상회하는 부분을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7년 교부세 정률분은 69조 7,000억원으로 현행 제도 대비 30조 5,000억원(30.4%) 감소하며, 이 중 15조 3,000억원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보전재원, 지방미래성장지원금, 통합특별시 지원,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호황기의 추가세수는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반면 추세치를 하회할 때의 보전 여부와 규모는 정부 재량에 맡겨져 있어, 세수 하강기의 부담이 지방에 집중될 수 있다. 또한 보통교부세 조정률은 2017년 94.0%에서 2026년 70.1%로, 세출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은 41.3%에서 34.0%로 낮아져 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자주재원은 축소되고 중앙정부의 처분 재량은 확대된다. 지방계정이 국고보조사업 위주로 구성되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중복된다는 점도 개편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추세치 하회 시 중앙정부의 보전의무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계정의 보전재원은 독립적으로 운용하되 사업성 예산은 포괄보조 방식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35% 반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며, 교부금은 최소한 전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에 따르면 개편안에 따른 교부금은 현행 제도 대비 연간 24조 1,000억원에서 34조 5,000억원까지 감소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둔화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령인구 반영률 35%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교부금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연평균 산정기간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안 분석

2027년도 예산안에는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전력·용수·산업단지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총 8조 9,000억원이 편성되었다. 반도체 분야는 법정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재정투자의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1.96%에 그치는 시스템반도체 등 산업구조 다변화를 고려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1조 5,000억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통합재정지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음에도 기금 출연 이후의 개별사업 추진계획 및 집행상황, 성과 등 점검체계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

피지컬AI는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법정 정책조정체계를 정립하고, 데이터의 생산·실증·활용이 선순환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AI데이터센터는 8개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어 통합 관리와 지자체 협업이 필요하며, 총사업비 3,740억원 규모의 AIDC 클러스터 사업은 예타 면제와 함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도 실시되지 않았다.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의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국가수도기본계획 반영 등 법정계획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 축소(5배→2배)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적자 등 수행기관의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사업 분석

2027년도 청년정책 예산은 43조 3,000억원으로 총지출의 5.3%를 차지하며, 2026년 추경(29조 9,000억원)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청년정책 예산의 54.0%가 미래대응기금의 청년계정과 교육·인재계정에 집중되어 있어, 일시적인 추가세수와 초과세수에 의존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역진성의 우려가 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은 기존 국가장학금 지원 수준을 고려하면 중위소득 130% 이상인 7~10구간의 학생이 받는 추가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고, 청년미래적

금도 고소득·고자산 청년까지 지원하여 세대 내 격차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 39세 이하 가구의 상위 10% 자산과 전체 평균 자산 간 격차가 2015년 2.65배에서 2025년 3.11배로 확대된 만큼, 자산형성 사업은 지원대상 선정 시 자산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생 시점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있다. 2027년 7월생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아동기본수당과 아이맞이지원금 체계로 개편되면서, 가정양육·수도권 기준으로 0세부터 12세까지 받는 현금수당은 2027년 6월 이전 출생아 3,560만원, 7월 이후 출생아 4,840만원으로 1,28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도 2026년 9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도 전환에 따른 형평성을 보완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률과 예산의 정합성 및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예산안에서 법령 제·개정과 연계된 분석 주제 48건을 검토하였는데, 법률안 미제출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가 45건, 법정 절차나 법률 규정을 우회한 경우가 6건이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구조 개편, 혼인지원금, 아동기본수당 등 정부의 핵심사업과 국가배상금, 산재보험급여 등 의무지출이 법률안 제출과 입법 논의에 앞서 예산에 편성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는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입법심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중장기 재정부담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도 72개, 총사업비 138조 3,000억원에 달하며, 2027년도 예산안에 10조 4,000억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를 사유로 면제된 사업이 46개로 총사업비의 93.6%를 차지한다. 예타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데,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재정지원, AIDC 클러스터 조성 등은 적정성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가며

2027년도 예산안은 대규모 세수 증가를 계기로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확대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 교부세·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등 재정운용의 틀을 바꾸는 시도를 담고 있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미래 성장기반 확충과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추가세수는 반도체 경기에 따른 일시적 재원이고, 그 재원으로 편성된 사업의 상당수는 기존 사업을 옮겨온 것이거나 한 번 도입되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적 지출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0.1%로 축소되는 해에도 국가채무는 106조원 늘어나고, 2028년 이후에는 재정수지가 다시 악화될 전망이며, 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일시적 재원이 지속적·경직적 지출로 고착되지 않도록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과 지출 구조를 재점검하고, 추가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 관리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금의 적립·인출 요건과 교부세 보전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타당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입법 상황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확인하여 재정구조 개편이 국회의 재정통제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7년도 국세수입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법인 영업실적 호조, 성과급 확대 등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 내수회복 등을 반영하여 2027년 국세수입을 593.7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정부의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584.4조원)을 9.3조원(1.6%) 상회하는 수준이다.



글. 한석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들어가며

최근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글로벌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종의 영업실적 호조 등으로 법인세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업실적의 증가가 성과급 등 특별급여 증가, 부동산 및 주식거래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세수입 실적은 8월까지 329.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9.1조원(26.5%) 증가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년의 경기상황과 세수흐름을 반영하여 2027년 국세수입을 593.7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2026년 전망(480.5조원) 대비 113.2조원(23.5%) 증가한 규모이며, 정부 예산안(584.4조원) 대비 9.3조원(1.6%) 높은 수준이다. 이하에서는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세입여건 및 경제전망을 반영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정한 2027년 국세수입 전망 결과를 소개한다.

2027년도 경제여건

우선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2026년 반도체 업종의 호황 등으로 높은 경제성장세(명목GDP 기준 22.0%, 실질GDP 기준 3.5%)를 기록한 우리 경제는 2027년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부문의 영업실적 증가가 내수회복으로 이어지면서 명목GDP 기준 7.3%, 실질GDP 기준 2.7%의 성장이 전망[1]된다.

지출 부문별로 살펴보면, 경제성장은 주로 기업의 투자 부문에서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AI 수요 확대에 대응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이 장비 반입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6.4%(실질가격 기준) 증가하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와 기업의 AI 전환에 따른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 등으로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간소비는 반도체 등 특정 산업군의 소득 개선과 실물 및 금융자산의 가격 상승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확대 등 하방요인도 작용하여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관련 지표의 경우, 취업자 수는 민간소비 회복세 지속, 건설투자 반등, 정부 일자리사업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8.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임금은 AI 관련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이에 연동된 성과급 지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6.5% 상승하여, 2026년(3.2%)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리의 경우 2027년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7월과 8월에 각각 0.25%p씩 인상되어 현재 3.0% 수준인데,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 등으로 2027년 국고채금리(3년)와 회사채금리(3년, AA-)는 각각 3.5%, 4.0%로 2026년(3.6%, 4.3%)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 다만, 2026년의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경제성장률은 2026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관수출의 경우, 2026년 반도체·컴퓨터 수출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다소 완만해지겠으나, 2027년에도 글로벌 시장의 반도체 공급부족이 이어지면서 IT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관수입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와 수출 관련 중간재를 중심으로 9.0% 증가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 등으로 2.4% 상승하여 2026년(2.7%)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주요 거시경제 지표 실적 및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2024	2025	2026(전망)	2027(전망)
명목GDP 성장률	6.5	4.4	22.0	7.3
실질GDP 성장률	2.2	1.1	3.5	2.7
민간소비	1.3	1.5	2.3	2.0
설비투자	1.0	1.5	6.9	6.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4	3.0	4.2	4.1
경상수지(억달러)	1,000	1,231	4,300	4,400
통관수출 증가율	8.1	3.8	54.0	10.0
통관수입 증가율	△1.7	0.0	22.0	9.0
소비자물가 상승률	2.3	2.1	2.7	2.4
취업자수 증감(만명)	15.9	19.3	13.4	18.0
명목임금 상승률	2.9	3.1	3.2	6.5
회사채금리(3년, AA-)	3.7	3.1	4.3	4.0

주 2024~2025년은 실적치, 2026년 및 2027년은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

2027년 국세수입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국세수입을 593.7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2026년 전망[2](480.5조원) 대비 113.2조원(23.5%) 증가한 규모이다. 이러한 국세수입의 증가세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영업실적의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법인세 증가가 주로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내수회복 등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의 2027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2) 이하 '2026년 전망'은 2026년 세수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의미한다.

(584.4조원)과 비교하면 9.3조원(1.6%)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대외경기 개선 및 내수회복세 등을 정부보다 높게 전망함에 따라 국세수입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영업실적과 거시경제 지표 등 세입여건을 보다 우호적으로 판단한 데에 주로 기인한다.

표 2 **2027년 국세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26 NABO 전망(A)	2027					
		정부 예산안 (B)	NABO 전망 (C)	전년 대비 (C-A)		예산안 대비 (C-B)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국세수입	480.5	584.4	593.7	113.2	23.5	9.3	1.6
소득세	152.1	180.0	181.7	29.6	19.4	1.7	0.9
법인세	138.3	216.7	222.1	83.8	60.6	5.4	2.5
부가가치세	88.2	91.4	93.3	5.0	5.7	1.9	2.1
기타 소비세수	38.1	40.3	39.9	1.8	4.8	△0.3	△0.8
개별소비세	9.0	8.5	8.8	△0.3	△2.8	0.2	2.7
교통·에너지·환경세	12.5	12.6	12.3	△0.2	△1.6	△0.3	△2.4
관세	8.1	8.7	8.2	0.1	1.3	△0.5	△5.3
기타 자산세수	63.8	56.0	56.7	△7.0	△11.0	0.7	1.3
상속세 및 증여세	19.0	15.6	15.6	△3.3	△17.6	△0.0	△0.0
증권거래세	12.2	10.7	10.7	△1.5	△12.2	0.1	0.6
종합부동산세	5.1	6.2	6.4	1.3	25.5	0.1	2.1

주 1. 기타 소비세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주세의 합계를 의미
2. 기타 자산세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과년도수입,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의 합계를 의미

자료 재정경제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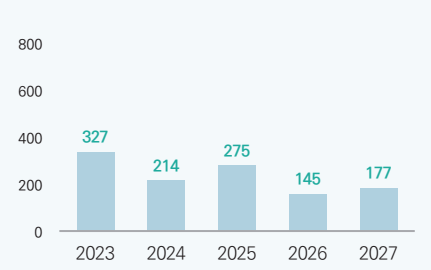
소득세

소득세는 2027년 181.7조원으로, 2026년 전망(152.1조원) 대비 29.6조원(1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180.0조원)을 1.7조원(0.9%) 상회하는 수준이다. 소득세의 증가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호조에 따른 성과급 확대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에 주로 기인하며, 내수회복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 기업의 배당지급 확대에 따른 배당소득세 증가도 소득세 증가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세부세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는 2027년 104.4조원으로 2026년 전망(78.1조원) 대비 26.3조원(3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임금근로자 수의 증가(17.7만명)와 함께 2026년 반도체 주요기업의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2027년 성과급 지급 확대로 명목임금 상승률(6.5%)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그림 1 임금근로자 증감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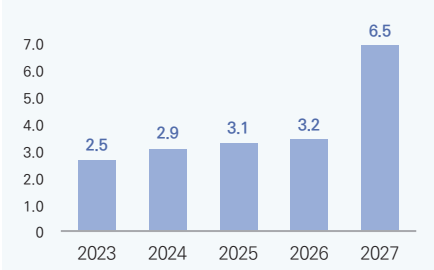


주 2026년과 2027년은 전망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2 명목임금 상승률

(단위: %)



주 2026년과 2027년은 전망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종합소득세는 2027년 25.0조원으로, 2026년 전망(23.3조원) 대비 1.8조원(7.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24.3조원)을 0.8조원(3.1%) 상회하는 수준이다. 2027년 종합소득세의 세원인 2026년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명목 민간소비가 전년 대비 5.0% 증가하는 등 내수회복과 경제성장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26년 귀속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1분기 1.1%, 2분기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2027년 23.9조원으로, 2026년 전망(26.9조원) 대비 3.0조원(△1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자산시장은 상반기에는 주식시장 호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2026.5.9.)를 앞둔 주택 거래량 증가 등 거래규모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 자산 거래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자산거래 추이와 함께 향후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제도적 요인을 반영하여 2027년 양도소득세를 전망하였다.

기타 소득세 세부세목의 경우, 배당소득세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영업이익 호조에 따른 배당 증가로 2026년 전망(7.1조원) 대비 4.1조원(57.1%) 증가한 11.2조원으로 전망된다. 이자소득세(7.1조원)도 2026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예금은행 수신금리 상승으로 전년 대비 0.5조원(6.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법인세는 2027년 222.1조원으로, 2026년 전망(138.3조원) 대비 83.8조원(6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216.7조원)을 5.4조원(2.5%) 상회하는 수준이다. 법인세의 증가는 글로벌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종의 영업실적 호조로 인한 신고분 증가(전년 대비 82.9조원, 74.3%)에 주로 기인한다. 법인세 원천

분도 비금융법인의 금융자산 증가와 배당수익 확대 등으로 0.9조원(3.3%) 증가한 27.6조원으로 전망된다.

2027년 법인세의 기반이 되는 2026년 법인 영업실적은 상반기 기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증권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의 상반기 영업이익과 세전순이익을 살펴보면, 전년동기 대비 각각 254.1%, 355.6%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과 세전순이익률도 각각 19.4%, 19.3%로 크게 상승하였다.

표 3 **유가증권 상장법인 영업실적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2024	2025	2026 상반기
매출액증감률	5.4	6.1	28.8
영업이익증감률	61.7	25.4	254.1
세전순이익증감률	83.6	28.2	355.6
영업이익률	6.7	7.9	19.4
세전순이익률	4.9	6.1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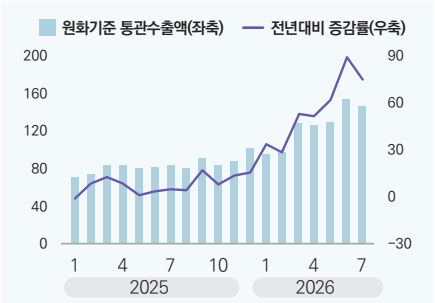
주 1.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영업이익률 및 세전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및 세전순이익의 비율

자료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러한 법인실적의 증가는 AI 관련 수요 확대와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에 주로 기인한다. 원화기준 통관수출액은 2026년 7월 누적 기준 885.3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8.0% 증가하였으며, 연간으로는 5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2026년 8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71.7% 증가한 가운데, 석유제품(41.2%), 선박(11.3%) 등 반도체 외의 주요 품목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도 개선되면서 수출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원화기준 통관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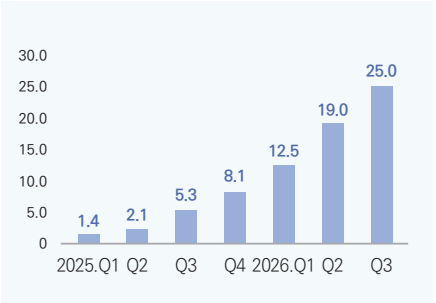
(단위: 조원,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산업통상부, 「월별 수출입 동향」

그림 4 **반도체 가격(DDR4 8GB)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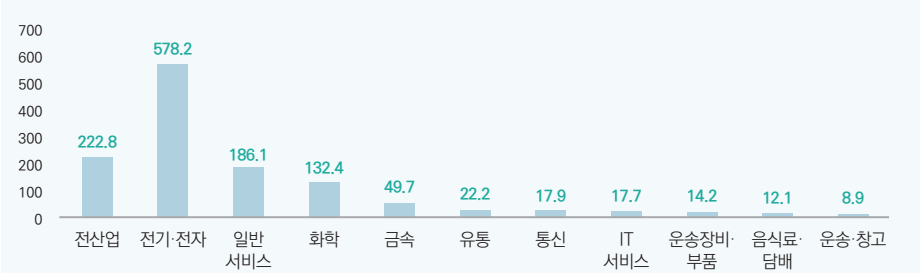


주 반도체 가격은 DDR4 8GB(1G×8) D램 고정거래가격 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산업통상부, 「월별 수출입 동향」

이러한 상반기의 기업 영업실적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한 증권사의 전망 컨센서스[3]를 살펴보면, 전산업 기준 전년 대비 200%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에는 50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일 전망[4]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기업의 영업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여 2027년 법인세를 전망하였다.

그림 5 2026년 유가증권 상장법인 업종별 영업이익 증감률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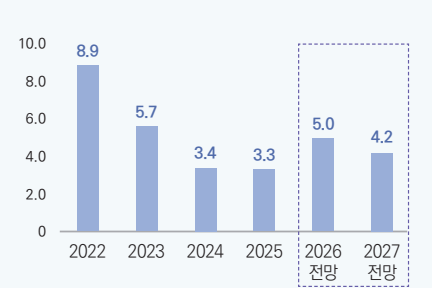
주 조회일 기준 3개월간 비금융업 상장법인 영업이익에 대한 각 증권사 전망치의 평균
자료 FnGuide(조회일: 2026.9.18.)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2027년 93.3조원으로, 2026년 전망(88.2조원) 대비 5.0조원(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 예산안(91.4조원)을 1.9조원(2.1%)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의 증가는 주로 민간소비의 증가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명목 민간소비 증감률 실적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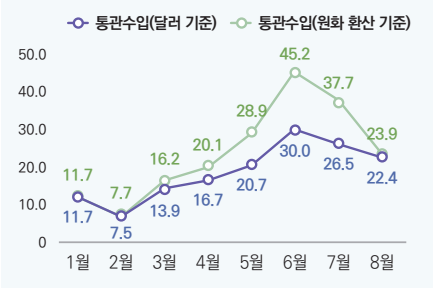
(단위: 전년 대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7 2026년 통관수입 증감률 추이

(단위: 전년동월 대비,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증권사 전망 컨센서스는 각 증권사가 최근 3개월간 전망한 비금융 상장법인 290개사의 2026년 영업이익 증감률 평균치를 의미한다.
4) 반도체 업종내 주요기업인 삼성전자는 2026년 3분기 영업이익 잠정치를 107.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82.5% 증가하였다고 발표(2026.10.8.)하였다.

2027년 명목 민간소비는 내수회복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통관수입은 수출 및 설비투자와 관련된 원자재·자본재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며 수입분 부가가치세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2026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를 감안할 때 증가율은 전년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세목

기타 소비세수는 2027년 39.9조원으로, 2026년 전망(38.1조원) 대비 1.8조원(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 0.5%→1.0%)의 세수효과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교육세(7.6조원)가 2.2조원(39.8%) 증가하는 데 주로 기인한다. 반면, 개별소비세(8.8조원)는 발전용 유연탄 소비 감소 등으로 0.3조원(△2.8%), 교통·에너지·환경세(12.3조원)는 경유 소비 감소세 지속 등으로 0.2조원(△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는 8.2조원으로, 원화기준 통관수입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0.1조원(1.3%)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기타 자산세수는 2027년 56.7조원으로 2026년 전망(63.8조원) 대비 7.0조원(△1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증권거래세(10.7조원)와 농어촌특별세(16.4조원)는 2026년 급등하였던 증권거래대금이 대내외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아 전년 대비 각각 1.5조원, 4.3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15.6조원)는 2021년 고액자산가 사망에 따른 상속세 연부연납이 2026년에 종료되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3조원(△1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종합부동산세(6.4조원)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주택분 세율 인상 등 제도변화 효과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3조원(2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가며

2027년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7년 국세수입을 593.7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584.4조원)을 9.3조원(1.6%)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최근 경제와 세수에 있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진 만큼, 반도체 업황 변화에 따라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 국내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유동성 변화 등도 세입여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7년 경제전망



2027년 국내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확장적인 재정기조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가세하면서, 내수가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여 2.7% 성장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감속 가능성, 주가 등 국내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중동전쟁 상황 악화와 고유가 지속 등이 성장의 주요 하방 위험 요인이다.



글. 정지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들어가며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 내년에도 대외수요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적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AI 투자 감속 가능성,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이 경제 여건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기 개선의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할 경우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될 우려도 있다. 이에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 여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중기적 시계에서 종합적으로 전망하여 지난 9월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을 발간하였다. 이하에서는 2027년 경제전망을 세계경제 여건, 국내경제 전망, 전망의 위험 요인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027년 세계경제 여건

> 2027년 세계경제는 중동, 미국 등 에너지 수출국과 AI 기술 선도국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전년에 비해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2027년 세계경제는 전년에 비해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중동, 미국 등 에너지 수출국과 AI 기술 선도국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나, 중동전쟁의 영향과 에너지 가격, AI·반도체 제조 기술 발전 정도, 재정·통화정책 여력 등에 따라 국가별 성장률 변화 양상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6년 2.8%에서 2027년 3.1%로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과 독일, 일본, 영국 등을 중심으로 2026년 1.6%에서 2027년 1.8%로 성장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



다. 개도국 경제는 2026년 3.7%에서 2027년 4.4%로 성장세가 회복될 전망이다. 중국은 민간소비 및 투자 회복 지연, 세계교역 증가세 둔화, 노동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반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은 AI·반도체 품목 등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도는 민간소비와 서비스업 호조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교역량은 중동·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차질 완화와 교역 정상화, AI 관련기술 제품 교역과 공급망 재편 효과 등으로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가 예상되며, 2026년 3.2%에서 2027년 3.5%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표 1 **주요 국제기구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구 분		2025	2026	2027
IMF		3.5	3.0(△0.1)	3.4(0.2)
	(미국)	2.1	2.3(0.0)	2.2(0.1)
	(중국)	5.0	4.6(0.2)	4.1(0.1)
세계은행		2.9	2.5(△0.1)	2.8(0.1)
	(미국)	2.1	2.2(0.0)	2.1(0.2)
	(중국)	5.0	4.2(△0.2)	4.3(0.1)
OECD		3.4	2.8(△0.1)	3.1(0.1)
	(미국)	2.1	2.0(0.0)	1.8(0.1)
	(중국)	5.0	4.5(0.1)	4.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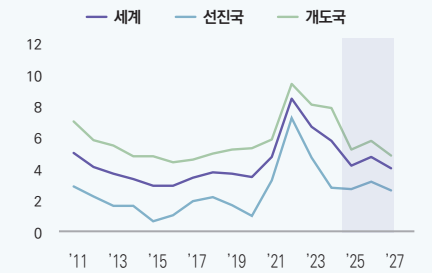
주 ( )안은 직전 전망 대비 수정폭(%p)
자료 IMF(2026.7.), 세계은행(2026.6.), OECD(2026.6.), 세계경제전망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2026년 4.7%에서 2027년 3.9%로 둔화될 전망이다. 주요국에서 유류세 인하, 전기·가스요금 동결과 보조금 지급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단기적으로 억제하고 있으나, 중동지역 에너지 공급 차질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입물가 상승과 금리인상, 성장세 둔화 등으로 이어지는 공급 충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및 걸프지역 생산이 회복되고 고유가로 위축되었던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배럴당 77달러 수준(전년 대비 △15.5%)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속도 및 걸프지역 생산능력 회복, 미국·브라질·캐나다 등 비OPEC 공급, OPEC+ 생산 정책, 세계 석유수요와 중국의 원유 수입, 정유 가동률, 재고와 전략비축유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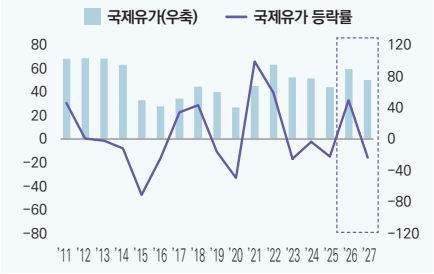
(단위: 전년 대비, %)



자료 IMF(2026. 7.) 세계경제전망

그림 2 국제유가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bbl)



주 브렌트유, WTI유, 두바이유 단순평균 기준
자료 IMF, 세계은행

2027년 국내경제 전망

2027년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가세하면서 경제성장률이 2.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중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실질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확장적인 재정기조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가세하면서 내수가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다만 수출(수입유발효과 제외)의 기여도[1]는 2026년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 “2027년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가세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는 2027년 0.5%p, 2026년 0.4%p로 2025년(0.5%p)과 비슷할 전망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27년 총지출 규모가 2026년 본예산 대비 12.8% 증가하여 예년의 평균 증가율 5.4%(2010~2025년 평균)보다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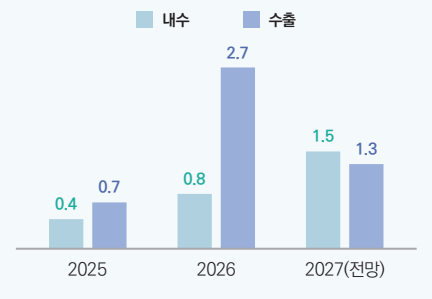
1) 순수출(총수출-총수입) 기준 성장기여도가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과소 계상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의 성장기여도에서 수출에 의한 수입유발효과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를 계산하였다. 수출의 수입유발효과 계산에는 산업연관표(2023년 연장표 기준)의 최종수요 항목별 수입유발액 중 수출의 수입유발액 비중(38.7%)을 활용하였다.

높으나, 국민계정 상 정부소비 및 투자와 직접 연관된 지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2)]

명목GDP 성장률은 2027년 7.3%로 2026년 22.0%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2027년에는 실질GDP 성장률이 2026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3.5%→2.7%), GDP디플레이터 상승률도 2026년에 비해서는 낮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17.8%→4.4%).

그림 3 내수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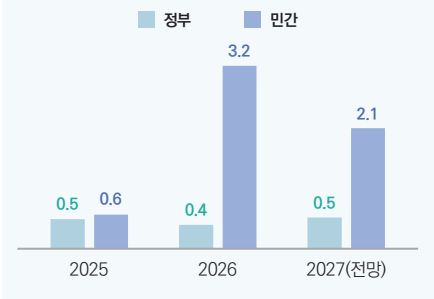
(수입유발효과 제외, 단위: %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6.9.),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한국은행

그림 4 정부와 민간의 성장기여도 전망

(단위: %p)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6.9.),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한국은행

주요 지출부문별 전망을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 제조업 등 특정 산업군의 소득 개선이 소비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여 민간소비는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 실물 및 금융자산의 가격 상승도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소비 증가율을 소폭 견인할 전망이다. 정부소비는 재정지출 증가세 확대, 건강보험급여비[3)]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0% 늘어 2026년(2.8% 전망)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민간투자는 전년 대비 4.1%로 비교적 높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투자 유형별로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5%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비주거용 건축 투자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AI 수요 확대에 대응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장비 반입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할 전망이다. 2027년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와 기업의 AI 전환에 따른 소프트웨어 투

2) 국회예산정책처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수록된 2027년 정부 예산안 상세자료에 국민소득통계와 유사한 체계를 갖춘 IMF의 '01 재정통계편람(GFS)을 적용하여 국민계정 기준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 항목의 2027년 예산상 증감률을 자체 추산한 결과,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는 2026년 국회확정예산(추경포함) 대비 각각 5.5%, 7.6% 증가하여 예년 평균(2010~2025년) 4.2%와 6.2%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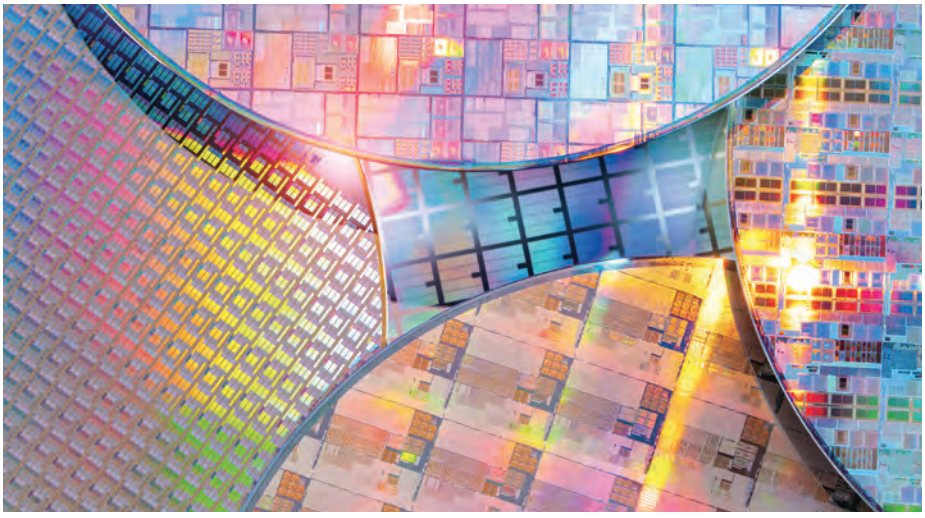
3) 건강보험급여는 무상급식과 함께 정부소비의 대표적인 사회보장현물수혜 항목이다. 사회보장현물수혜는 정부가 개별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이며, 2024년 기준 일반정부의 명목소비지출(447.5조원)에서 건강보험급여비가 포함된 사회보장현물수혜(145.5조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피용자보수(169.5조원, 37.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자 확대가 성장 동력으로 가세하면서 전년 대비 4.1% 성장할 전망이다. 정부투자는 R&D 분야와 지역 및 도시 부문, 물류 등의 SOC 투자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할 전망이다.

2027년 총수출은 전년 대비 4.2% 증가할 전망이다. 중동전쟁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컴퓨터 등 글로벌 AI 관련 투자가 호조를 이어가면서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제기구는 세계교역량 증가율이 2026년 3.2%에서 2027년 3.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AI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세계 교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하이퍼스케일러[4]의 재무 부담 확대와 전력 인프라 병목 등은 AI 투자를 제약할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총수입은 수출용 원자재·중간재 수입과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재 수입이 함께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5.5% 증가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4,400억달러 흑자로 전년(4,300억달러 예상) 대비 흑자 규모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2027년에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수지는 여행수지 악화, 연구개발 서비스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본원소득수지는 해외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전망된다. 2027년에는 상반기 2.7%, 하반기 2.1%로 상승률이 점차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중 물가 상승을 주도한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이 점차 소멸되면서 2029년에 이르러 물가안정목표(2%)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 미국의 대형 IT 기업을 말한다.

취업자 수는 민간소비 회복세 지속, 건설투자 반등, 정부 일자리사업 확대 등에 힘입어 18만명(0.6%)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 115만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2027년 118만개로 확대하고 대학생 6만명을 대상으로 인턴 학기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이는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림어업의 고용 감소세가 최근 가팔라지고 있는 점은 총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명목임금 상승률은 6.5%로 전망된다. AI 관련 반도체 기업의 큰 폭의 실적 개선과 이에 연동된 대규모 특별급여 지급의 영향으로 명목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금리(3년)는 2026년 대비 0.1%p 하락한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 국고채금리의 하락이 전망되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

표 2 **2026~2027년 국내 경제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 분	2025	2026	2027
국내총생산	1.1	3.5	2.7
민간소비	1.5	2.3	2.0
정부소비	2.7	2.8	3.0
정부투자	△0.2	△1.4	2.0
건설투자	△9.7	0.6	1.5
설비투자	1.5	6.9	6.4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0	4.2	4.1
총수출	4.3	9.0	4.2
총수입	3.3	7.6	5.5
경상수지(억달러)	1,231	4,300	4,400
상품수출(통관)	3.8	54.0	10.0
상품수입(통관)	0.0	22.0	9.0
취업자증감(만명)	19.3	13.4	18.0
실업률	2.8	2.8	2.9
명목임금	3.1	3.2	6.5
국고채금리(3년)	2.4	3.6	3.5
소비자물가	2.1	2.7	2.4
GDP디플레이터	3.2	17.8	4.4
명목국내총생산	4.4	22.0	7.3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 국고채금리는 연중 평균
2. 2026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6. 9.),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로 예측된다. 회사채금리(3년 만기, AA-) 또한 국고채금리 하락 등에 따라 2027년 4.0%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지난 7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전망치 2.2%보다 0.5%p 높다.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정부 전망치가 국회예산정책처보다 높다. 그러나 여타 항목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정부보다 높았으며 특히 수출(통관기준)과 설비투자 전망치의 차이가 크다. 이 밖에 건설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의 전망치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높았다.[5)]

2027년 명목GDP 성장률은 국회예산정책처가 7.3%, 정부가 4.6%로 보고 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실질GDP 성장률을 2.7%로, 정부는 2.2%로 각각 전망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중 수출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여건 개선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 등에 힘입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4.4%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전망치인 2.4%를 상당 폭 웃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4%로 정부의 2.2%보다 높게 잡고 있는 데다 국제유가 하락 등에 따른 2027년 중 디플레이터 상승 가능성을 정부에 비해 더 높게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의 2027년 실질GDP 구성항목별 전망 비교** (단위: 전년 대비 증가율, %)

구 분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실질GDP	2.7	2.2
민간소비	2.0	2.1
정부소비	3.0	-
정부투자	2.0	-
건설투자	1.5	0.8
설비투자	6.4	3.3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1	3.0
수출(통관기준)	10.0	1.0

주 기획예산처는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는 전망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은 통관기준으로만 전망치를 제시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예산처(2026.7.)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5) 정부 전망이 발표된 7월에는 중동전쟁의 전개 방향이 매우 불투명하였고 국제유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반도체 호조의 지속 여부도 아직 확신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인식의 차이와 가용한 정보량의 차이가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간의 차이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전망의 위험 요인

>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 감속 가능성, 주가 등 국내 자산가격의 변동성 확대, 중동전쟁 상황 악화와 고유가 지속 등이 성장의 주요 하방 위험 요인이다.

2027년 세계경제의 성장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주요 하방 요인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및 비료 등 원자재 공급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 재상승과 주요국 통화긴축 장기화, 관세 및 수출통제 등 보호무역 재강화, AI 투자 및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위험 등이다. 상방 요인으로는 중동지역 안정 및 에너지시장 정상화, AI 투자 확대 및 생산성 증가 등이다.

우선, 가장 큰 단기적 하방 요인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공급 충격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지역 에너지 수송 차질이 장기화되면 원유·가스뿐 아니라 비료·식량·해상운임·보험료가 함께 상승한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수입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물가상승에 대응한 고금리 기조가 심각한 성장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세 및 수출통제 등 보호무역 재강화에 따른 하방 위험이다. 관세 및 수출통제가 확대되면 교역과 기업투자가 줄고, 특히 AI 장비와 핵심 투입재 규제가 강화되면 현재의 가장 큰 상방 요인인 AI 기술투자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 현재 미·중 관세전쟁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고율 상호관세 부과가 11월 10일까지 유예된 상태이다. 미국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선택적 관세 인하와 중국의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관세 휴전이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미·중 관세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AI 투자 및 자산가격의 급격한 조정 위험이다. AI 관련 수익성과 생산성 기대가 낮아지면 데이터센터·반도체·전력 인프라 투자가 급격히 조정될 수 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시장과 AI 하드웨어 수출국의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의 효과와 금융 연계를 통해 소비·투자에도 충격이 전해져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6)]

가장 직접적인 상방 요인은 중동전쟁의 조기 안정과 에너지 가격 정상화이다. 중동지역의 에너지 생산 및 수송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되어 원유·가스·비료가격이 하락하면 운송비와 제조원가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질 것이다. 이는 가계 실질소득과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여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국내경제의 주요 상방 위험 요인으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가시화, 반도체 기업의 배당 확대와 그에 따른 가계 소득여건의 추가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하방 요인으로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AI 인프라 투자 감속 가능성과 주가 등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중동전쟁 상황 악화와 고유가 지속 등이 있다.

최근 정부와 기업은 반도체 생산기반을 획기적으로 키우기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6) IMF는 기술기업 중심의 높은 주가와 시장집중도를, OECD는 기술기업 가치에 노출된 사모신용·사모펀드를 금융 취약성으로 지적하였다.

를 발표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부지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이 계획이 조기에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투자가 활성화되며 차세대 성장동력 구축이 한층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반도체 기업들이 배당 확대 등 주주이익 환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 민간소비 회복세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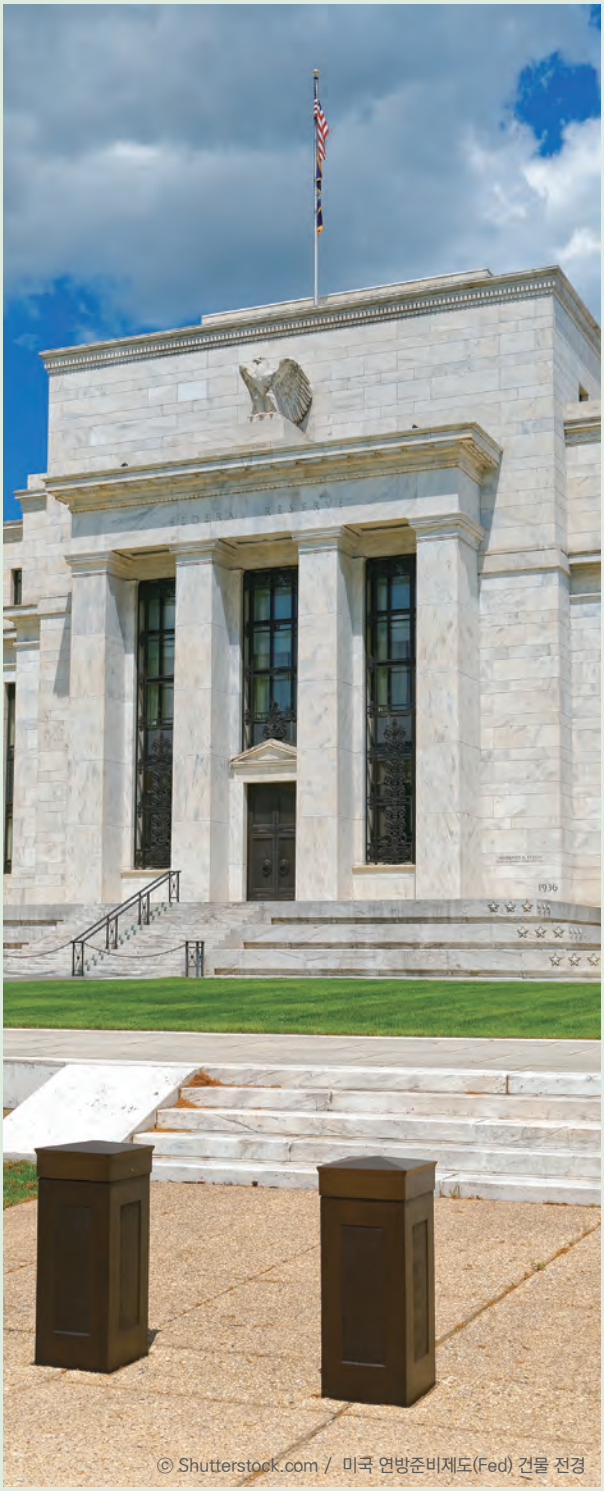
반면,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의 이유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에 기대고 있는 반도체 수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투자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난 7월 주가급락과 유사한 형태의 조정이 주식시장 또는 여타 자산시장에서 다시 발생하게 된다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소지도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이 공격으로 파손되는 등 중동전쟁 상황이 재차 악화되며 국제유가 불안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마치며

> 반도체 중심의 기업이익 증가가 국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산업·계층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성과의 확산 경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올해 반도체 수출 호조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내년에는 내수의 역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집중된 성장의 성과가 여타 산업과 가계부문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시차가 예상되며, 산업별 소득·고용 여건에 따라 회복의 정도도 상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중심의 기업이익 증가가 국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산업·계층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성과의 확산 경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AI·반도체 투자 확대와 함께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중기 성장잠재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산업 인프라와 R&D에 대한 기업투자 여건 개선과 세제·금융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Shutterstock.com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건물 전경

현안진단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김영주 한국은행 거시전망부장

52

미래대응기금의 전략적 자산화를 위한 제언:
아일랜드 등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58

경상수지 흑자 4,000억달러 시대의 해외투자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외환분석부장

66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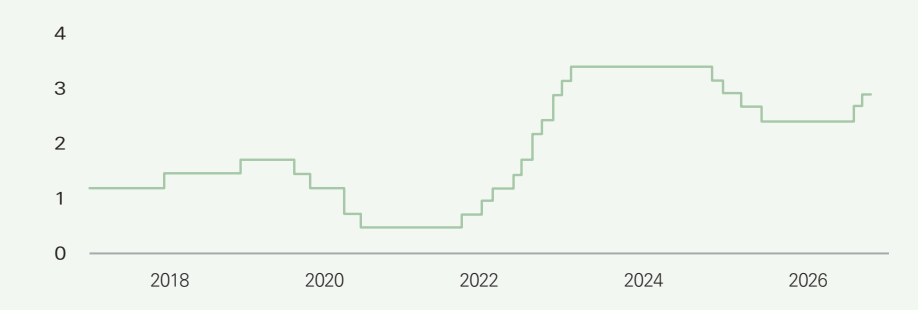
글. 김영주
한국은행 거시전망부장

한국은행은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강한 경기확장과 물가상승 압력 증대에 대응하여 1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소득여건 개선으로 내수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수요측 물가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우려도 지속되고 있어 성장, 물가, 금융안정 측면에서 선제적인 통화긴축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금리인상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고 비용충격의 2차 파급을 억제하는 한편, 경기과열과 금융불균형 누적을 방지함으로써 향후 더 큰 폭의 긴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에 유의하면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등의 조화로운 운용을 통해 물가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1년 9개월 만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p 올린 데 이어 8월 27일에도 0.25%p를 더 올려 3.00%로 높였다. 2024년 10월 금리인하를 시작해 지난해 5월까지 금리를 내린 뒤 14개월간 동결해 왔는데, 인하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에 인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특히 7월에 인상을 시작하자마자 다음 회의에서 추가 인상에 나선 점이 과거의 기조 전환기와 다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 오름세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오른 물가를 뒤쫓아 대응하기보다는, 경기 확장에 따른 물가압력이 굳어지기 전에 미리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을 성장, 물가, 금융안정 측면에서 차례로 짚어 보고, 선제적 인상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본다.

그림 1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

성장: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강한 경기확장

국내경제는 반도체 경기호조를 바탕으로 예상을 크게 웃도는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수출과 설비투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오르면서 교역조건이 크게 좋아졌고, 그 결과 국민의 손에 실제로 쥐어지는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금년 2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5.6% 증가해 38년여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국은행은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월의 2.6%에서 3.3%로 0.7%p 높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역성장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4.7% 성장한 2021년 이후 5년 만의 최고치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2.1%에서 2.9%로 0.8%p 높아졌다.

부문별로 보면 재화수출과 설비투자가 성장을 이끄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의 이익 개선이 성과급과 임금상승 등으로 이어지면서 민간소비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수의 순성장기여도는 올해 하반기 0.9%p에서 내년 상반기 1.3%p, 하반기 1.8%p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이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크게 웃돌면서, 당초 내년에야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았던 GDP갭의 플러스 전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진 것으로 평가된다.

표 1 국내 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2025	2026	2027
GDP	1.1	3.3 [2.6]	2.9 [2.1]
민간소비	1.5	2.1 [2.0]	2.3 [2.1]
재화수출	3.3	9.7 [4.9]	4.6 [3.3]
건설투자	-9.7	0.2 [0.6]	1.9 [1.5]
설비투자	1.5	6.8 [4.4]	4.7 [2.7]

주 [ ]는 2026년 5월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물가: 경기확장에 따른 기조적 물가오름세

강한 경기확장은 물가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6월 3.2%까지 올랐다가, 7월에는 석유류가격 오름세가 꺾이면서 2.8%로 낮아졌다. 그러나 8월에는 다시 3.1%로 높아졌고,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 상승률은 7월 2.6%에서 8월 3.4%로 뛰어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여기에는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으로 물가가 일시적으로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하였지만, 개인서비스 물가가 3.5% 오르는 등 기조적인 물가압력도 함께 커졌다.

이는 원가상승에 따른 비용측 압력에 수요측 압력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8월 경제전망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올해 86달러에서 내년 74달러로 내려갈 것으로 보면서도,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해와 내년 모두 2.5%로 높여 잡았다. 유가 상승 등 비용충격이 내구재 등 다른 품목으로 번지는 가운데 소득여건 개선으로 수요 압력까지 더해지면서, 유가가 내려가더라도 물가오름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길어질 위험이 커진 것이다.

금융안정: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공급부족 우려와 전월세시장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입 전환 수요가 맞물리면서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지속되고, 가계대출도 주택거래량 증가와 개인 주식투자 확대 영향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경기 호조와 소득증가가 자산가격 상승 기대와 맞물릴 경우 금융불균형이 재차 누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주식자금 유출과 달러강세 영향으로 1,500원대 중반까지 높아졌다. 최근 외환수급이 개선되면서 1,300원대 중후반으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를 통해 국내물가를 밀어 올리는 만큼, 환율불안은 물가와 금융안정 양쪽에서 긴축의 필요성을 키운 요인이다.

선제적 인상의 필요성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 물가, 성장, 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는 중요한 고려요인이다. 물가가 목표를 웃돌아도 경기가 부진하면 금리를 올리기 어렵고, 경기둔화에 대응해야 하더라도 가계부채가 불어날 우려가 크면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2024년 10월 금리인하를 시작할 당시가 성장과 금융안정이 크게 엇갈린 경우였다. 경기흐름이 불확실해 금리인하가 필요했지만, 금리인하가 서울 아파트값과 가계대출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비해 현재는 성장, 물가, 금융안정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고, 물가는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어 세 측면 모두 긴축이 필요



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편이 정책비용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어, 나중에 필요한 긴축의 강도와 기간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성장에 주는 부담도 덜 수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8월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인상을 일정 폭 앞당기는 것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피하고 경제가 치를 최종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설명하였다.

팬데믹 이후의 경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은 2021년 8월 주요국보다 먼저 금리인상에 나섰는데, 인상폭이 크지 않았음에도 물가상승률 정점(6.3%)이 미국(9.1%)과 유로지역(10.6%)보다 낮았고 목표 수렴도 빨랐다. 더 적게 올리고도 더 빨리 물가를 잡은 셈으로, 선제적 대응이 물가안정을 앞당기면서 성장에 주는 부담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기준금리 인상의 기대효과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는 금리, 자산가격, 환율, 기대 등 여러 경로를 거쳐 실물경제와 물가로 퍼져 나간다. 이번 인상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부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물가 측면에서 금리인상은 수요압력을 낮춰 유가상승 같은 비용충격이 임금과 다른 품목 가격으로 번지는 2차 파급효과를 억제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분절로 공급충격이 잦아진 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을 목표수준에 안착시키는 것이 물가 변동성을 낮추는 데 특히 중요하다.

성장 측면에서는 적기의 금리인상이 성장세가 잠재수준을 지나치게 웃돌지 않도록 막아, 경기과열과 그 뒤에 올 수 있는 급격한 경기변동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호황의 성과가 물가상승과 자산가격 급등으로 사라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금리인상이 대출금리를 끌어올려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소득과 자산가격 상승 기대가 주택시장으로 쏠리는 흐름을 제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금리만으로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세제개편안이 주택시장과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주택시장 기대와 가계대출이 자극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 세제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때 금융불균형 완화 효과도 커질 것이다.

한편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강한 소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그간 가계와 기업의 부채비율도 낮아져 경제 전반의 감내능력이 높아진 만큼,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과거 인상기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부문별로 소득개선 정도가 엇갈리고 있어,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한계기업, 저소득층 등 취약부문의 빚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금융 지원과 함께 채무 재조정 등 구조 개선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정책방향 및 맺음말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강한 경기확장이 물가오름세의 고착화와 금융불균형 확대로 이어지기 전에 이를 미리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성장, 물가, 금융안정 모두에서 긴축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대응을 늦추면 나중에 더 큰 정책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경기의 향방,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중동 정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향후 정책 조정은 새로 나오는 지표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물가안정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제적 대응이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경제 전반의 안정적 성장으로 이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전략적 자산화를 위한 제언: 아일랜드 등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글.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전례 없는 세수 증가는 재정운용 기조에도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수년간 이어지더라도 항구적인 세입 기반의 확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과거 추세를 벗어나는 세수 증가분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세수 부진기에도 잠재성장률 제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취지를 실현하려면 별도 기금의 편익이 채무상환이나 국채 발행 축소의 편익을 웃도는지 설명해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자산으로서 오랜 기간 지속되기 위해,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필요한 유동성의 규모와 보유비용을 평가해 여유 재원을 채무부담 경감과 재정평탄화 재원으로 배분하고, 기금의 적립·운용·인출 규칙은 법으로 명확히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인출 재원의 용처는 정부와 국회의 예산심의에 맡기되, 위험과 운용비용을 고려한 기대편익 및 엄격한 인출 규칙을 전제로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립계정이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세수 호황기 이면의 잠재성장률 둔화: 정책 대응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년 1.66%로 둔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변동에 따른 높은 단기 성장률과 달리, 한국은행과 KDI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둔화를 제시하고 있다. KDI는 구조개혁과 생산성 개선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초반 음(-)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잠재성장률은 생산요소의 축적과 생산성 및 제도 변화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이므로, 정부지출 확대만으로 단번에 높아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거의 불가역적인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추이를 고려하면, 생산성과 자본투자 병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는 환영할 일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1인당 생활 수준이 유지되더라도 경제 전체 규모가 정체될 수 있다. 잠재성장률 둔화는 곧 세수 기반의 확장을 제약하므로,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는 성장 정책이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일시적 세수 호황 뒤의 세수 부진: 재정안정화 장치의 필요성

코로나19 위기 이후만 살펴봐도 호황기의 세수가 빠르게 줄어든 경험은 매우 익숙하다. 당시 해외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하여 2021년과 2022년에는 세수가 급증했으나, 2023년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이 급감하면서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56.4조원 부족했다. 2024년에도 30.8조원이 부족했다. 호황기의 세수 전망을 그대로 연장해 지출 수준을 높이면,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재정은 세입 감소와 경기 대응 지



출 증가라는 이중의 압박을 받는다. 특히 최근 법인세수의 상당 부분이 소수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에 좌우되는 구조이므로, 세수 추계 단계에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세입의 민감도를 점검해야 한다. 일시적 세수를 항구적 지출의 근거로 삼으면, 세수 호황은 다음 침체기의 재정 부담으로 바뀐다.

세수 변동성을 완충할 장치는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는 옳다. 문제는 설계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정부의 재량에 따른 기금 운용을 우려하며, 일시적 세수 증가분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다음 세수 부진기의 채무 확대 여력을 확보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논쟁의 뿌리는 기금의 적립·운용·인출에 관한 규칙과 채무 부담 경감 대비 기금 신설 편익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데 있다. 기금의 성패는 설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계마다 재량을 묶는 준칙과 절차를 통해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달려 있다.

아일랜드의 두 기금: 장기 FIF와 중기 ICNF

아일랜드는 한국과 유사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법인세수가 소수 미국계 빅테크·제약 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의 실적과 글로벌 최저한세 등 국제조세 환경에 따라 세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법인세 초과세수로 재정수지 흑자가 이어졌지만, 2023년 실질GDP가 역성장하자 아일랜드 정부는 이를 지속 가능한 구조적 흑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중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운용 시계가 다른 두 기금을 만들었다.



장기 세대 이전 기금인 미래 아일랜드 기금(Future Ireland Fund, FIF)은 2024~2035년 매해 2년 전 GDP의 0.8%를 적립한다. 인출은 2041년부터 허용되고 인출연도 2년 전 말 순자산의 3%를 넘거나 적립 원금을 훼손하는 인출은 제한된다. 직전 10년 연율화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 일반정부 채무의 연율화 이자비용을 밑도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원 결의를 거쳐 같은 기준 순자산의 5%까지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원금 보전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중기 유동성 기금인 인프라·기후·자연 기금(Infrastructure, Climate, and Nature Fund, ICNF)은 2024년 기존 국가준비기금에서 20억 유로를 이전받고, 이후 2030년까지 매년 20억 유로를 적립한다. 경제·재정 여건의 중대한 악화에 대응하는 인출은 관련 적립 중단 등 법정 요건과 의회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법정 기준 순자산의 25%까지 가능하다. 기후·자연 관련 지정 사업에는 2026~2030년 동안 매해 순자산의 22.5%(누적 31.5억 유로) 한도로 인출할 수 있다.

두 기금의 목적과 운용 시계가 다르니 투자전략도 다르다. FIF는 글로벌 주식 중심의 장기 포트폴리오를, ICNF는 1~3년물 글로벌 채권 중심의 안전자산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실제 보유자산 전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ICNF의 장기 자산배분에는 고위험 공모채권도 일부 포함된다. 두 기금 모두 국내 투자 의무는 없다. 두 기금의 적립·운용·인출에 관한 세부 준칙과 절차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에 명시되어 있다.

아일랜드 사례의 시사점은 세 가지다. 첫째, 장기 적립과 중기 유동성 기능을 분리해 위기 때의 장기 기금의 원금 훼손 압력을 중기 기금이 흡수하게 했다. 둘째, 주요 재량 행위에 평가와 의결 절차를 부과했다. FIF 적립을 줄이거나 중단하려면 독립재정자문위원회의 평가, 재무장관의 평가, 정부 승인, 하원 결의라는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ICNF 적립은 FIF 적립이 전면 중단된 경우에만 멈출 수 있다. 셋째, 자산운용은 상업적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에 맡기고, 정부와 의회는 법정 절차에 따라 재정을 통제하며, 독립재정기구는 경제 및 재정 여건을 평가한다. 이는 기금 자산의 운용과 인출 재원의 정책적 사용을 구분하는 설계다.

미래대응기금 설계의 네 가지 보완

1. 중심은 규칙으로

현재 설계에는 세입 부족에 대응하는 총괄계정의 인출 한도가 없어, 총괄계정 여유자금이 세수 둔화기에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적립 규모, 운용 원칙, 연간 인출 상한, 기금 잔액 상한 등을 법률에 정량 준칙으로 명시하고, 적립의 감액·중단은 독립적 평

가와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관리·운용계획 수립부터 결산까지 사실상 기획예산처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금융성 기금의 계획 변경 특례까지 차용한 지금의 구조에서는 국회의 상시적 심의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2. 여백은 재량으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오랜 신뢰를 받은 비결은 인출 총량만 통제하고 용처는 정부와 의회가 예산심의로 정한다는 데 있다. 기금에서 예산으로 재원을 이전하려면 의회의 결정이 필요하고, 재정준칙은 장기적으로 기금의 기대 실질수익률 3%에 맞춰 재원을 사용하도록 한다. 언젠가 집권할 야당도 자신의 정책 기조에 맞게 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금이 정권을 넘어 유지된다. 이 점에서 청년·지방·성장동력·교육의 4대 용처를 사업성 계정으로 기금 안에 고정한 설계는 재고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업은 일반·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입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고, 기금에는 재정안정화와 자산 적립 기능만 남기는 편이 낫다.

3. 빚부터 갚을 것인가: 네거티브 캐리에 대한 정부의 설명 책임

보너스를 받으면 빚부터 갚고 여유가 있으면 저축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이다. 그런데 2027년 총괄계정 162.3조원 가운데 채무 감축 금액은 12.5조원(7.7%)에 불과하다. 한편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는 국채 100.1조원은 5년간 상환되지 않는다. 일반 국민의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비용이다.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대 초중반인 상황에서, 중기 유동성을 유지해야 하는 기금의 운용수익률은 조달금리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 운용수익률이 조달금리보다 0.5~1.5%p 낮다면 100조원당 연 0.5~1.5조원 안팎의 이자 역마진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이자 역마진을 네거티브 캐리라고 한다. 기존 장기부채의 이자비용이 고정된 상태에서 단기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면 역마진이 확대될 수 있다. 네거티브 캐리를 위한 국고채 추가 공급이 장기금리를 밀어 올린다면 민간의 자본비용도 높아져,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기금의 목적과 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자본이득 개인소득세 기반), 코네티컷(개인소득세 기반), 텍사스(석유가스 생산세 기반)의 재정안정기금도 차입금리보다 수익이 낮은 유동자산을 보유하는 네거티브 캐리를 감수한다. 최근 아일랜드의 FIF·ICNF의 경우에도 국채 발행으로 적립금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기금들은 기금 규모의 상한이나 초과분 처리 규칙, 인출 준칙 등 기금이 무한정 커지거나 단기간에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대응기금 설계안과 크게 다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기금은 주가 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의 변동성에 기반하고 있어서 반도체 대기업 중심의 법인세수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기금 규모의 상한을 일반회계 세수의 10%로 제한(2026년 11월 주민투표로 20% 확대 추진)하고, 일반회계 수입의 1.5%에 해당하는 기본 적립분과 초과 자본이득세수를 합한 금액의 절반을 2029~2030회계연도까지 부채관련 의무지급에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예산 비상 선포 첫해의 인출은 기금 잔액의 절반 이하로 제한된다. 적립, 부채부담 경감, 인출 제한을 함께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물론 기금의 편익이 네거티브 캐리의 비용을 넘을 수도 있다. 위기 때 국채 발행이 어려워질 위험에 대비한 유동성 보험, 기대수익이 조달비용을 넘는 장기 운용 수익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내년 차환 발행 규모만 100조원을 넘을 만큼 국채 시장이 깊고 국내 투자자 기반이 두터운 한국에서, 유동성 보험의 가치가 100조원 규모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용처가 사업 지출로 정해진 기금에서 장기 운용 수익이 쌓일 여지도 크지 않다. 인출 제한이 약하면 일시적 세수결손을 보전하는 자기 구속 효과도 작아진다. 국채 시장 접근이 원활한 경우 쓰지 않고 남겨둔 차입 여력이 더 저렴한 비상금일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려면 정부는 증거에 기반한 네거티브 캐리의 적정성을 제시해야 한다. 네거티브 캐리에 대한 합리적 근거에 따라 국채 발행 축소 규모를 산정하고, 기금에는 반도체 하강 전환 등 세수 결손 시나리오로 산정한 만큼의 재정평탄화를 위한 유동성만 남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규모에서 생기는 역마진은 보험료로 보고 예산에 명시해야 한다. 여유자금 운용수익률과 조달비용의 차이는 매년 공시하고 독립재정기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4. 미래 세대의 몫

2030년 국고채 잔액 1,577.4조원은 다음 정부로 고스란히 이전되지만, 인출 한도 없는 여유자금은 그 전에 소진될 수 있다. 구조적으로 늘어날 국가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다면, 적어도 미래세대가 대응할 재정 유산을 함께 남겨야 한다. 총괄계정을 재정안정화계정과 장기적립계정으로 나누자. 재정안정화계정은 일정 수준 채무를 줄이고 남는 재원으로 채우고, 세수 결손액의 일정 비율만 인출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쓴다. 장기적립계정에는 교육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등에 따른 구조적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매년 적립하고, 실질 원금을 보전하며 장기 운용한다. 물가상승분을 넘는 장기 운용수익의 일부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전하여 현세대와 과실을 공유한다. 지출 용처를 미리 정해 두는 칸막이와 달리, 구조적 절감액을 쓰지 않고 쌓아 두는 적립규칙은 미래세대의 몫을 보전하는 장치이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동안에는 절감액으로 쌓은 자산도 경제적으로는 차입으로 쌓은 것과 같다. 차이는 시계와 규칙에 있다. 중기 유동성 자산의 운용 수익은 조달금리를 넘기 어렵지만, 장기 분산투자의 기대수익은 조달비용을 웃돌 여지가 있다. 또한 갚은 빚은 다음 정부가 다시 빌릴 수 있지만, 원금 인출을 법으로 제한한 계정은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는다. 장기적립계정은 FIF처럼 원금 보전 원칙과 수익 인출 상한이 법에 명시되고 위험과 운용비용을 고려한 기대편익이 채무부담 경감의 편익을 상회해야만 나은 선택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맺음말: 기금이 성장의 자산이 되려면

규칙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지킨다면, 인출 재원의 배분은 경제성장 효과를 좌우한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고려하여, 민간이 스스로 투자하기 어려운 병목에 먼저 배분해야 한다. 전력망과 용수 같은 보완적 공공자본, 반도체 이후를 준비할 인재와 연구 생태계, 무형자본과 서비스업 생산성을 끌어올릴 기반이 그것이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의 성패도 공장 자체보다 이를 떠받치는 기반에 달려 있다. 기금 자산을 불리는 운용은 상업적 기준으로, 성장 투자는 생산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자산운용과 정책사업 집행을 구분해야 기금이 개별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창구로 쓰이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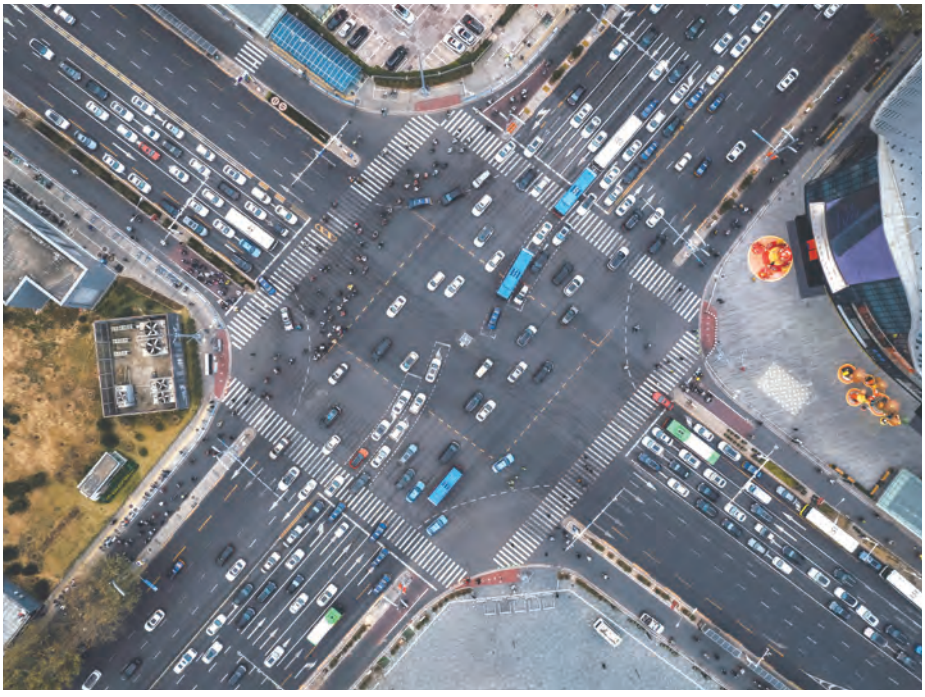
동시에 재정 투입만으로 잠재성장률이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생산성을 가로막는 것은 돈보다 제도인 경우가 많다. 기금이 성장 투자의 마중물이 되려면 규제개혁과 짝을 이뤄야 하고, 지출마다 사전 목표와 사후 성과평가가 따라야 한다. 집행 부처는 사업 성과에 책임을 지고, 독립적 평가·검증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다음 연도 재원 배분에 반영해야 한다. 기금 규칙을 점검하는 독립기구는 규칙 준수와 관련 평가 결과를 검증·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되, 구체적 재원 배분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으로 남겨야 한다.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서사의 성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고 그 크기도 불확실하다. 국민을 설득하려면 눈에 보이는 성과와 보존되는 자산이 함께 있어야 한다.

기금의 지속가능성은 규칙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여야 모두가 제도를 유지할 유인을 갖는가에 달려 있다. 적립·운용·인출이라는 중심은 객관적 규칙으로 묶고, 재원 배분은 시대적 우선순위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정하는 여백으로 남겨야 한다.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기금이 정쟁의 언어에 묻히지 않도록, 국회 심의 단계에서 기금의 설계를 건설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호황의 지속 시간은 불확실하다. 이번 호황의 과실이 항구적 지출 확대의 근거로 쓰이고 다음 침체기에 대비할 여력이 남지 않는다면, 청구서는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 미래세대는 이 논쟁에 참여할 투표권도 목소리도 갖고 있지 않다. 채무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며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의 장기 자산을 물려주는 규칙을 세우는 일은 지금 미래세대와 맺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약속이다.

※ 이 글은 필자 개인 의견일 뿐 소속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경상수지 흑자 4,000억달러 시대의 해외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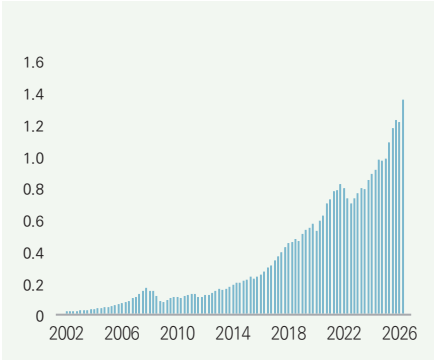
글. 최성락
국제금융센터 외환분석부장

2010년대 중반 이후 해외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외환수급에 있어 내국인의 자본유출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었다. 특히 작년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상회하면서 '경상수지 흑자=원화 강세'라는 공식이 깨졌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원/달러 1,500원대가 '뉴노멀'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러한 상황은 금년 7월 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반전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원화 강세의 주된 이유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였다. 해외증권투자 확대가 외환시장 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해외투자 행태가 지금에 비해 어떤 변화를 보일지를 다루기로 한다.

2026년 6월말
해외증권 보유액
1.38조달러,
성인 1인당
4,300만원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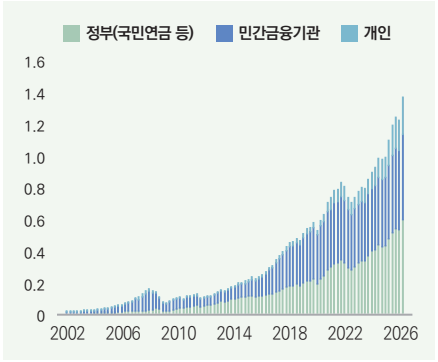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해외증권투자(외환보유액 제외)는 2015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증권 보유액은 2015년말 2,355억달러로 증가한 후 2020년말에는 7,083억달러로 급증했고, 2026년 6월말 1.38조달러에 이르렀다. 성인 인구를 4,300만명이라고 한다면, 1인당 약 3만 2,000달러, 원화로는 약 4,3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는 국민연금과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자산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지만, 국민의 부(wealth)가 해외 자산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사례이다. 특히, 2020년 이후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가 용이해지면서 개인의 직접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이는 해외투자를 가속화하는 원동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림 1 우리나라 해외증권투자 잔액 (단위: 조달러)



자료 한국은행

그림 2 주체별 해외증권투자 잔액 (단위: 조달러)



자료 한국은행

해외투자 확대가 외환시장 또는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긍정적 측면이라면 배당·이자 등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 '제2의 외환보유액' 효과에 따른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 가계의 부(wealth) 창출 및 투자자산 다변화 등을 열거할 수 있고, 부정적 측면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역시 환율 상승 압력이며, 그 외에도 국내 자본시장의 소외 및 이에 따른 전반적인 국내 투자 위축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긍정적·부정적 측면들은 각각이 개별적인 심층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이지만 그동안 여러 저술과 보고서에서 많이 다루어 온 만큼, 이 글에서는 최근의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와 외환수급 구조의 변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 시 해외투자의 행태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026년 우리나라는 역대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8월 경상수지는 46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3개월 연속 월 4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지속 중이며, 1~8월 누계로는 2,792억달러에 이른다. 물론 이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 2026년 경상수지 흑자 4,000억달러 돌파 예상, 전 세계에서 중국과 함께 유이한 사례

급증의 결과이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1~2년 내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금년 4,000억 달러 흑자는 무난해 보이며, 내년에도 금년과 비슷하거나 더 큰 흑자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연간 경상수지 흑자 4,000억달러는 중국을 제외하면 그동안 어느 나라도 기록해보지 못했던 수치이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생긴 첫 번째 변화는 외환수급에 있어 달러 공급 우위가 극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외환수급 구조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달러 공급을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상쇄하는 모습이었다. 2025년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1,231억달러였는데, 해외투자로 유출된 자금은 1,403억달러에 달했다. 수출로 들어온 외화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해외투자로 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2025년 6월말 1,340원대에서 12월말 1,440원대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원화 강세 공식이 파괴됐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금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026년 1~8월 해외투자로 유출된 자금은 743억달러이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2,792억달러에 달하면서 해외투자 유출액을 크게 상회한 것이다. 상반기까지는 수출업체들이 달러 환전을 미루면서 원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었지만, 7월부터 본격적인 네고 물량이 출회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1,550원대에서 10월 하순 1,300원대로 급락했다. 물론 7월 이후 원화 강세에는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금리인상과 달러화 약세 등의 여러 대내외 요인이 가세한 결과이지만, 9월 이후 달러화가 강한 강세 흐름으로 반전한 이후에도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것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기저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투자 행태에 미칠 영향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일반적으로 해외투자의 확대로 이어지는데,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달러가 넘쳐날 경우 원화 강세가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수출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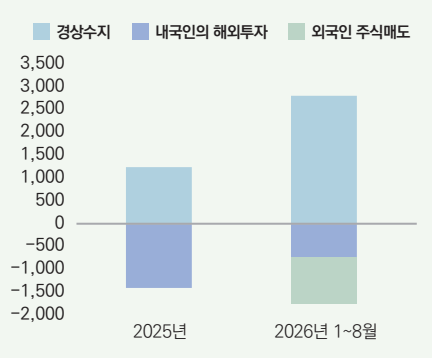
경상수지 흑자 확대=자본의 해외유출 확대

닭에 다시 해외로 흘러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전 과정에서 시중에 원화 통화량이 급증하게 되면 국내 자산시장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 등을 발행하면 이자와 같은 유동성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반적인 거시경제의 균형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과 해외로 나가는 돈이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경상수지 흑자=자본의 해외 유출'의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하며, 실제로도 대체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 서술한 금년 해외투자 규모를 보면 743억달러에 불과해 경상수지 흑자 2,792억달러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자본의 해외유출'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그 답은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자금 유출이다. 금년 1~8월 중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008억달러의 자금을 유출시켰다. 기타 직접투자나 대출, 해외예금 등으로도 일부 유출이 이루어졌지만, 내국인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의 주식투자 회수가 금년 자본 유출의 주요 요인이다.

그림 3 2025년 VS 2026년 외환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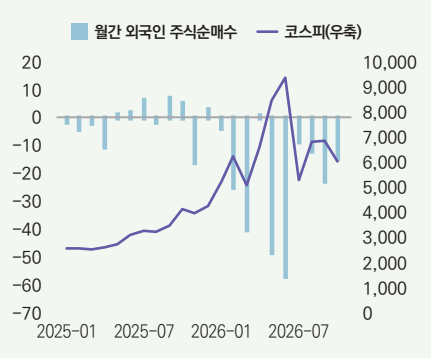
(단위: 억달러)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그림 4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 동향

(단위: 조원)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과거와 같은 정책적 해외투자 장려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외국인의 주식 매도는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10월 하순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까지는 국내 주가가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중심으로 급등세를 이어갔기 때문에 차익실현 또는 포트폴리오 집중 방지를 위한 리밸런싱 목적의 매도로 이해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주가 조정이 상당 폭 이루어진 이후에도 비중 축소 목적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향방을 예상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외국인 자금유출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완화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 이후에 '자본의 해외 유출' 경로는 필연적으로 해외투자의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해외투자의 확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는 정책적인 독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정책당국은 1990년대

후반 해외투자 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해외투자 자율화 정책, 2000년대 중반 비과세 혜택 등이 포함된 해외투자 장려 정책, 2010년대 중반 세제 혜택과 외환규제 완화 등을 중심으로 한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며 당시 경상수지와 환율 상황에 따라 해외투자 정책을 장려한 바 있다. 지금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이례적으로 크지만,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 수출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민들이 과거 통상적으로 경험했던 레벨에 비해서도 조금 높아 보인다. 국제 유가가 여전히 높고, 중동 상황은 아직 불안정하며, 글로벌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등 현재의 대외 여건이 자본 유출을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유가 된다. 2020년 이후 개인의 해외증권 직접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민간의 자율적인 해외 투자를 저해할 만한 장벽이 사라진 만큼 굳이 정책적인 장려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기도 하다.

"적절한 환헤지가 필요한 여건으로 변화할 가능성"

다음으로 고려할 만한 요인은 환헤지 전략이다. 해외투자 환헤지 여부는 투자주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2010년대 중후반부터 환오픈이 대세로 정착되었다. 이는 2010년대 중반부터 달러화가 장기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 자체를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게 된 점이 작용했고, 원/달러 환율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실제로 환차익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2년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하면서 환헤지 시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진 것도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장기 하락세를 보일 경우 이러한 환헤지 행태도 바뀔 수 있다. 실제로 S&P500에 환오픈으로 투자하고 있었다면 7월 이후 주가가 약 5%의 수익을 올릴 동안 환율에서는 약 14%의 손실을 보았을 것이다. 원/달러 환율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있어 확실한 것은 없지만, 해외 IB들 사이에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바탕으로 적어도 향후 1~2년간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만약 원화 강세가 꾸준히 지속된다면 환헤지 비중을 늘릴 만한 충분한 유인이 된다. 최근 들어 시중에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한·미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비용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헤지 비용 하락으로 해외채권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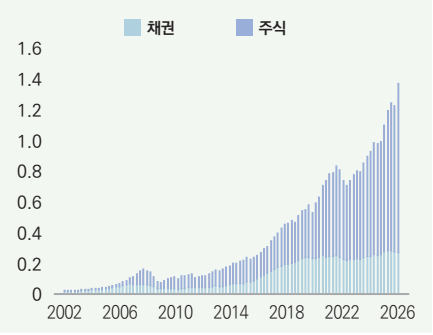
특히 해외채권 투자의 경우 많은 은행 및 보험사들이 환위험을 헤지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헤지 비용의 절감은 해외투자를 늘리는 유인이 된다. 2026년 1~8월 해외채권 투자는 32억달러로 작년 259억달러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재정건전성 등의 이유로 미국 및 유럽 선진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 압력(채권 가격 하락)에 노출되며 채권 시장의 매력이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이에 더해 최근까지 환헤지 비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것도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달러 선물환 매도를 통해 환위험을 헤지한다고 한다면, 작년 중반까지 환헤지 비용은 약 2.3%에 달했고, 금년 상반기까지도 1%를 상회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가 9월 들어 0.6%까지 낮아지는 국면으로 개선되었다. 최근 미국 금리가 급등하면서 헤지 비용이 다시 소폭 상승했으나, 글로벌 국채시장 불안이 진정되면 풍부한 달러 유동성을 기반으로 헤지 비용이 낮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해외채권 투자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대외자산 규모 감안하면 포트폴리오 분산 필요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투자 자산의 다변화이다. 특히 서학개미의 경우 투자 지역은 미국에, 자산은 주식에 소위 '몰빵' 수준으로 집중되어 있다. 일부 소수 섹터를 중심으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서 포트폴리오 분산 관점에서 보면 투자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전체 해외증권 자산 구성을 봐도 주식 비중이 80%에 달하고, 그중 미국 비중은 약 70%에 이르고 있다. 투자 자금의 흐름은 수익률을 추종하기 마련이기에 그동안 성과가 좋았던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은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자산의 규모가 커질 대로 커진 만큼 이제는 위험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8월말 기준 해외주식 자산의 규모는 1조 1,100억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주가가 10% 등락할 때 자산가치가 1,100억달러, 원화로는 약 150조원이 변동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제는 대규모 대외자산 보유와 함께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도 진행되어야 할 때이다.

그림 5 전체 해외증권 중 자산별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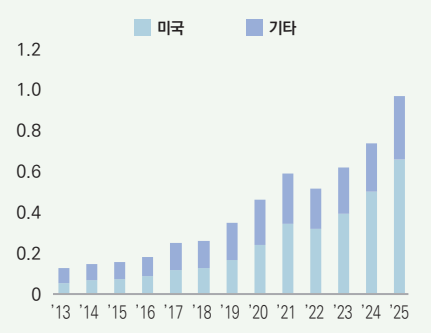
(단위: 조달러)



자료 한국은행

그림 6 해외주식 중 국가별 잔액

(단위: 조달러)



자료 한국은행



WORK & REPORT

예산정책자문위원 기고:
AI 대전환과 재정 패러다임의 변화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예산정책자문위원장
74

OECD 국가 재정·경제 동향:
프랑스 재정건전화의 딜레마와 한국 재정에 대한 시사점
황영준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78

NABOSTATS의 주요 통계 소개: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읽는 경제통계
노현정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80

NABO 발간보고서 소개
84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101

NABO 소식
104



예산정책자문위원 기고

AI 대전환과 재정 패러다임의 변화

글. 임도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예산정책자문위원장

AI 전환의 폭

오늘날 인공지능(AI)과 자율자동화 기술의 급격한 진화는 장밋빛 기대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인공지능은 LLM으로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단계를 벗어나 피지컬 AI, 그리고 범용 AI로 기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풍요를 누리는 기반이 된 산업 구조 및 노동체계에 혁명적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통제형, 효율성 중심의 예산체제를 기본으로 한 국가의 뼈대를 이루는 거시경제 및 재정 시스템 전체에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3개 강점인 반도체, 피지컬 AI와 로봇, 데이터센터에 민간투자를 합하여 1,350조원을 투입하여 AI 3대 강국에 자리매김하겠다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개발하고 도입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진정한 과제는 'AI가 초래할 세입 기반의 붕괴'와 '재정 지출 소요의 폭증'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다.

예산과 정책은 상관관계가 높다. 돈이 있어야 정책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산업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인간의 생활 양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에 인간의 중심을 넘기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 수호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세입 구조의 위기: '한계비용 0'과 전통 세원의 해체

초거대 AI와 고도화된 로봇 공학은 단순 육체노동을 넘어 고도의 지식 노동까지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생산도 점점 기계로 대체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고용효과가 컸던 자동차 생산, 건설 분야에도 노동자가 점점 필요 없게 되어, 극단적으로는 인간이 한 명도 없는 완전 무인공장인 다크 팩토리(Dark Factory)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예컨대, 현대차그룹의 제조·물류 자동화를 주도하는 현대위아가 2028년까지 창원공장을 완전 무인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자본과 기술의 독점이 소수 다국적 기업에 집중되는 한편 한계비용이 0에 가까워지는 생산적 비약이 이뤄질 수도 있다. 초기 설비투자를 제외하면, 원료값, 전기값 등 아주 작은 액수의 비용만 지불하기 때문이다.

반면, 대다수 노동은 필요성이 사라진다. 각 분야의 R&D, 기획, 그리고 공장기계의 유지보수 등 한정된 분야에서 소수 정예의 인력만 필요하고, 단순 반복적인 노동, 중간 이하의 지능이 필요한 업무는 인공지능이 하게 된다. 생산 현장에서는 인공지능이 결합한 기계가 피곤해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24시간 작동하기 때문에 대규모 구조적 실업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근로소득세'와 '기업 소득세(법인세)' 등에 기반한 전통적 세원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특히 고용이 소수 정예인력에만 유지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현저히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법인세의 비중이 늘 것이다. 생산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법인세가 현격히 줄어든다. 이렇게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될수록 과세 기반(Tax Base)은 급격히 잠식된다. 즉, 조세 정의에 위기가 오고, 재정 수지 악화(Fiscal Squeeze)가 생길 것이다.

그렇다면 대부분 사람이 실업자이고, 피지컬 AI와 자동화된 공장이 부를 창출하는 사회에서 "세금은 누가 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즉, 헌법 제32조 제2항의 근로의 의무, 그리고 헌법 38조의 납세의 의무는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 될 것이다. 노동자가 없이 기계만이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낸 생산품을 팔아 생긴 수익에 법인세를 대폭 매기면 좋은 것인지, 오히려 공장에서 활용될 AI를 설계한 사람과 기업이 수익을 많이 가져가서 그들이 법인세를 많이 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GDP의 60%,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분야는 인간과 유사하거나 더 완벽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될 경우 더욱 타격이 클 것이다. 인간보다 더 수술을 잘하는 로봇 AI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인데, 여기에 과세의 문제가 생긴다. AI에 일종의 법인격을 부여하여, 부과하는 AI세가 신설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세출 구조의 재설계: 목적형 재정과 행정효율성

세입 구조뿐만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 지출(세출) 구조 역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현재의 사업별, 부처별 예산 배분 방식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세출구조는 근대국가 형성 시부터 발달한 공급자 중심의 예산이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해 준다는 원칙에 입각해 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해결하는 목적형이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기본적으로 발전행정모델에 입각하여 아직도 국가가 경제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목표를 두고 있다. 즉, 산업정책, 인프라 정책, 복지 등 모든 예산이 경제성장



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AI 시대가 도래하면, 물적, 사회적, 심리적 '휴먼 안전'이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국방·치안은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특히 가상공간에서 AI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디지털안전이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AI 특성상, 즉시 대응이 관건이므로, AI 피해의 예방 및 즉각대응 분야에 많은 예산 지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고용구조의 대전환에 부응한 소득양극화, 즉 사회형평성 실현에 많은 예산이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구조적 실업상태에서 일자리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에 예산지출의 중점을 둬야 한다. 예컨대 문학·철학·문화예술·관광·스포츠 등을 통해 자아표현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 배분을 한층 늘려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는 정책개발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목적형 재정이 분야별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Efficiency)과 같은 방법론적인 측면은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예컨대, 기존의 복지예산은 유사 중복 프로그램, 복지부정수급 등 복지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많은 선진국이 앓고 있는 소위 '복지병'은 예산 집행의 비효율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누구에게 얼마만큼 복지수혜가 가야 하는가를 인공지능이 정확히 찾아내고, 실시간으로 즉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AI 사용능력이 부족한 사각지대를 어떻게 없애는 것이 중요한 복지전달체계의 과제가 될 것이다. 더 큰 틀에서는 현재의 극히 세부적으로 발달한 여러 복지프로그램들이 과연 적절하냐의 문제의식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수단을 놓고,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휴머니즘 거버넌스와 국제적 리더십

행정학자 허버트 알렉산더 사이먼(Herbert Alexander Simon) 교수가 쓴 공상소설과 같은 '인공지능과학'이란 책을 읽었던 필자는 10년 전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했을 때 놀랐다.[1] 이제 인간 수준을 넘어서는 초 AI(Super AI)가 2030년쯤 개발된다는 예측과 같이 놀랄 만큼 빠르게 기술 진보가 이뤄지고 있다. 전 세계 정부는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고 천문학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있다.

공공예산제도는 정치권력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기본 목표 아래, 예산낭비 방지 및 회계적 장부의 균형을 맞추는 도구에서 출발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도구로 발전해 왔다. AI와 같은 혁명적 기술의 대전환기에 정부예산은 기존 패러다임에서 근본적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주목할 것은 구글, 엔비디아 등 초거대 다국적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짐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다국적기업의 AI에게 어린이와 같이 무력하게 노출된 개개인을 지켜줄 것은 국가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산 규모 면에서 큰 정부 대 작은 정부의 논쟁 차원이 아니다. 적어도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정부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인류역사상 기술 대 인간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신기술의 이면에는 거대 자본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본대 인간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해킹 등 악의적 범죄도 예방해야 하겠지만, 언제 AI가 스스로 큰 재난을 일으키거나 인간에게 대량 희생을 가져오는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

21세기 초 국제정치학자 롤런드 패리스(Roland Paris)는 전쟁 예방과 같은 물리적 안전을 넘어 광범위한 차원에서 인간 안보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2] 여기에 더하여, AI라는 가공할 기술에 대응하여,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라는 휴머니즘의 가치를 재부상시킬 필요가 있다. 즉, 예산체제에서 세입 구조의 혁신적 개편과 세출 배분의 전략적 재조정을 아우르는 '휴머니즘 거버넌스'로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민이 기계에 지배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하는 예산은 부족하다. 내년 예산에서 AI 안전에 관한 부분은 274억원으로 AI 개발 예산 6조원의 0.5%도 안 되는 수준이다. 즉, 예산 및 재정구조의 큰 변혁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홍익인간이라는 휴머니즘을 실현할 것인가라면, 구체적으로 편성 및 공공 시스템 기획 초기 단계부터 알고리즘의 공정성, 재정적 파급 효과, 그리고 사회적 가치 충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사전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예산을 더 투입하여야 한다. 이런 고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산업사회에서 축적된 제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함으로써 생기는 예산 낭비와 정책적 오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AI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그 안전 문제는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만 다뤄질 성질이 아니다. 휴머니즘 거버넌스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AI 안전을 각국에 확립하고 통제할 국제기구도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를 점하여야 한다. 국제적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AI 개발 경쟁에 앞서는 것 못지않게 AI 윤리와 안전 분야 국제 리더십(Global AI Leadership) 확립이라는 기회의 창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다.

1) Simon, H. A.(1969), 「The Sciences of the Artificial」, Cambridge, MA: MIT Press.
2) Roland Paris(2001),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ir?, International Security 26 (2): 87–102, doi: https://doi.org/10.1162/016228801753191141

OECD 국가 재정·경제 동향

프랑스 재정건전화의 딜레마와 한국 재정에 대한 시사점

글. 황영준
국회예산정책처 부이사관



2026년 10월 초 프랑스에서는 교사 결원과 과밀학급, 낡은 시설에 항의하는 고등학생 시위가 900곳 가까운 고교로 번졌다. 같은 시기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장중 4.9%대 후반까지 올라 독일 국채와의 금리차가 150bp(1.5%p)를 넘어섰다. 2011년 말 이후 가장 큰 격차다. 두 나라는 통화와 통화정책이 같으므로, 이 금리차는 투자자가 프랑스 국채에 추가로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으로서 프랑스의 재정·정치 위험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다.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재정 여력은 차입비용 상승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가 10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은 GDP 대비 일반정부(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 EU 재정규칙의 기준) 재정수지 적자를 2026년 5.4%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26년 적자 전망부터 당초 목표인 5.0%에서 상향 수정되었다. 정부가 제시한 540억 유로의 재정 개선 효과 역시 전년 대비 적자 감소액이 아니라, 새로운 조치가 없을 때 예상되는 적자(6.5% 이상)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조정에도 전년 대비 적자 축소폭은 0.4%p에 머문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도 2025년 115.7%에서 2027년 121.7%로 오르고, 이자비용은 2026년 792억 유로에서 2027년 912억 유로(GDP의 2.9%)로 늘어날 전망이다.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이 채무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자비용의 증가다. 프랑스 독립재정기구인 고등공공재정위원회(HCFP)는 이자비용 증가가 다른 분야의 절감 노력을 상당 부분 흡수한다고 지적하였다.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은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의 차환을 거치며 누적된다. 2027년 프랑스 정부 예산안이 가정한 10년물 금리(4.3%)는 2027년 명목성장률 전망(2%대 후반)보다도 높다. 아직은 채무 전체의 평균 이자율이 2%대 중반으로 명목성장률보다 낮지만, 차환을 거쳐 이를 넘어서면 기초재정수지(이자 제외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리지 않고는 채무 비율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긴축의 속도를 높이기도, 늦추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긴축을 서두르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HCFP가 이미 낙관적이라고 평가한 2027년 실질성장률 1.0% 전망이 흔들리고, 세수도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조정을 늦추면 적자와 차입이 누적되어 이자 부담이 커진다. EU 재정규율은 조정을 미룰 여지를 더욱 좁힌다. 프랑스는 2024년 7월부터 EU 초과적자절차(EDP) 대상으로, 2029년까지 적자를 GDP의 3% 미만으로 낮추고 2026~2028년 순지출(이자·일회성 지출 등을 빼고, 재량적 증세 효과를 차감한 지출)의 명목 증가율을 매년 1.2%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2027년 적자가 5.0%에 머문다면, 이후 2년 동안 연평균 1%p를 넘는 추가 축소가 필요하다.

이 딜레마의 뿌리에는 오랫동안 굳어진 지출 구조가

있다. 프랑스는 1974년 이후 균형재정을 이루지 못했고,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률도 2025년 GDP의 43.6%에 이른다. 증세만으로 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지출 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그 중심에는 연금이 있다. 연금지출은 2025년 4,220억 유로로 GDP의 14.1%, 전체 공공지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은퇴자의 평균 생활수준도 전체 인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HCFP에 따르면 2027년 연금지출은 물가연동 제한을 반영하고도 90억 유로 늘어난다. 가장 큰 지출 항목의 증가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조정 부담은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여력도 줄어든다.

다만 공공서비스의 문제를 예산 총액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공공지출은 GDP의 57.2%로 유로지역 평균보다 7.4%p 높다. 2027년 국민교육부 예산도 12억 유로 늘었고, 교원 감축 규모인 1,588명은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원을 줄일 경우의 9,600명보다 작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교사 부족과 시설 문제를 호소한다는 것은 예산과 인력이 현장의 필요에 맞게 배분되고 있는지 살펴야 함을 뜻한다. 일반계 고교의 학생 1인당 지출이 OECD 평균을 웃도는데도 결원 대체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교직의 매력도 낮아, 임금에 만족한다는 중학교 교사의 비율은 26.6%로 OECD 평균 38.7%보다 낮다. 교육서비스를 개선하려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면서 지역·학교별 인력 배치와 대체교사 운영, 교직의 매력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지출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는 세대 간 부담 배분이 핵심 쟁점이 된다. 고교생과 대학생은 교사 충원과 시설 개선, 대입 플랫폼인 Parcoursup 개혁, 주거 지원을 요구하지만, 교원 정원 감축과 주거수당(APL) 인상 동결은 이들의 필요와 충돌한다. 이들은 앞으로 누적된 채무와 이자비용도 부담할 세대다. 반면 연금 조정은 거듭 지연되거나 철회되었다. 법정 퇴직연령을 64세로 올리는 2023년 개혁은 2028년까지 중단되었고, 2026년 연금 동결안도 의회에서 철회되어 기본연금이 0.9% 인상되었다. 2027년 예산안은 월 1,260유로 초과 연금의 물가연동 제한과, 과세소득 중 연금액의 10% 공제 상한을 낮춰(가구당 4,439유로→3,000유로) 은퇴자에게 전체 조정액의 약 10%인 55억 유로의 부담을 요구했지만, 이 안은 10월 7일 하원 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은퇴자 단체와 국민연합(RN)·좌파 정당도 반발하고 있다.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은퇴 세대에 대한 조정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으며, 물가연동 제한의 폭도 시행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대선 이후 바뀔 여지가 남아 있다. 그렇다고 조정 부담을 교육과 청년 지원에 집중시킨다면, 장기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화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함께 약화시킬 수 있다.

프랑스 사례는 재정건전화의 성패가 호황·저금리기에 재정 여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리고 조정 부담을 세대 간에 어떻게 나누는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저금리기에 구조적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금리 상승 이후에는 이자비용을 감당하면서 공공서비스와 미래 투자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커진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증가를 반영해 GDP의 0.1%로 제출되었지만, 국가채무 총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106조원 늘고 정부 계획상 이 적자 비율은 2030년 2.9%로 다시 높아진다. 따라서 특정 산업의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를 구분한 구조적 수지를 기준으로 지출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추세를 웃도는 세수의 일정 비율을 채무 감축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빠른 고령화에 대비한 관련 지출의 조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호황을 장기 재정 여력으로 연결하고 세대 간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어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와 재정건전성을 함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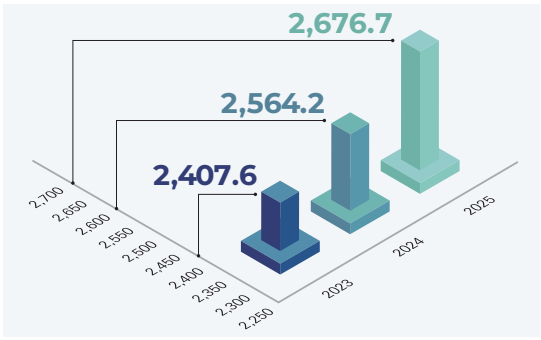
우리 경제의 흐름을 읽는 경제통계

NABOSTATS

글. 노현정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총괄담당관실 정책분석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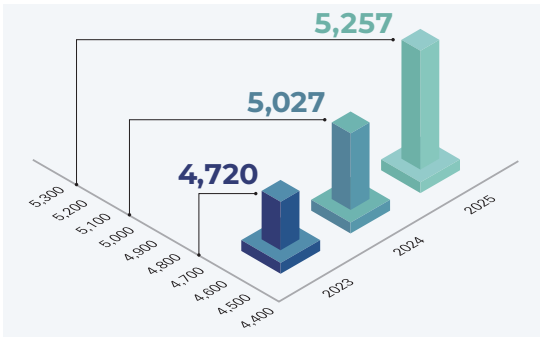
| 명목 국내총생산(GDP) (2023~2025)

(단위: 조원)



| 1인당 국민총소득(GNI) (2023~2025)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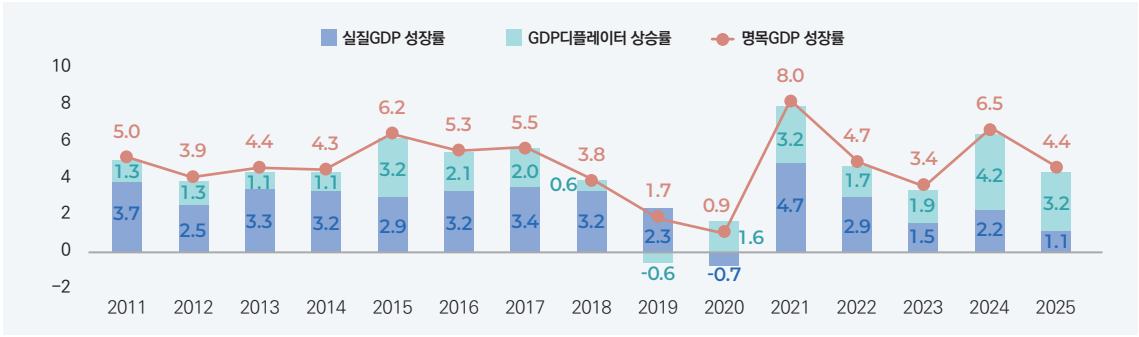


주 1.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국민총소득을 총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1인당 금액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주로 이용됨
2. 2025년은 잠정치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경제통계-국민계정

| 실질 및 명목GDP 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 상승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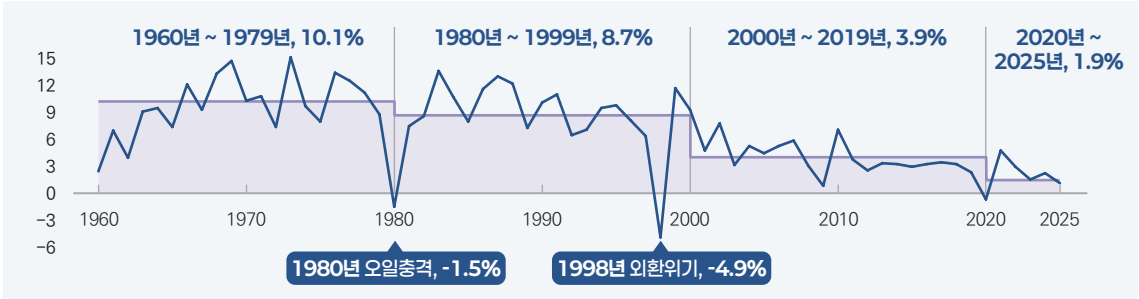


주 1. GDP 디플레이터는 국민계정 추계결과 사후적으로 계산되는 물가지수로서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누어 산출되며, GDP 추계 시 이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임금, 환율 등 각종 가격변수를 포함함. 명목GDP 성장률은 GDP디플레이터 상승률과 실질GDP 성장률의 합의 근사치임
2. 2025년은 잠정치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경제통계-국민계정

|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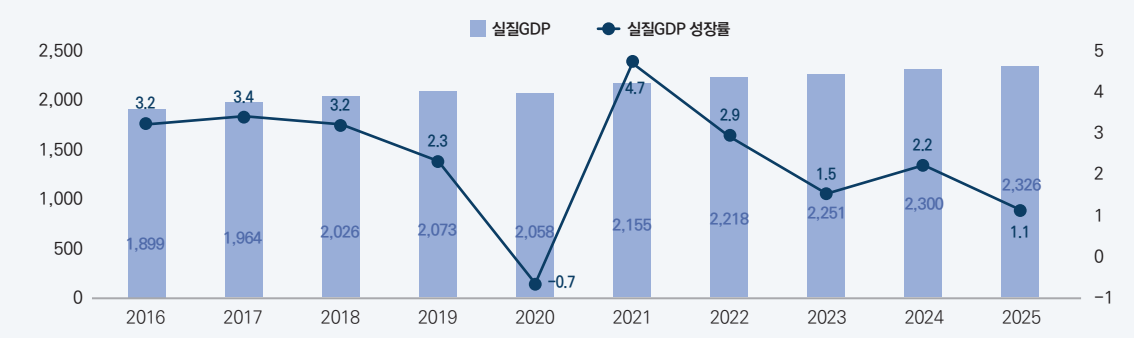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경제통계-국민계정 /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경제」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6년 2/4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1]은 전기대비 9.2% 증가하여 2025년 2/4분기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로는 26.4% 증가하여 1979년 3/4분기(27.7%)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명목GDP는 생산량의 변화뿐만 아니라 물가 변동에 따른 가격 요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명목GDP의 증가만으로는 실질적인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격변화분을 제거한 실질GDP[2]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통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이하 "NABOSTATS")에서 최근 10년간(2016~2025년) 실질GDP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실질GDP 성장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0.7% 역성장하고 2021년에는 기저효과로 반등하여 4.7%를 기록한 이후 추세적으로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최근 10년간 실질GDP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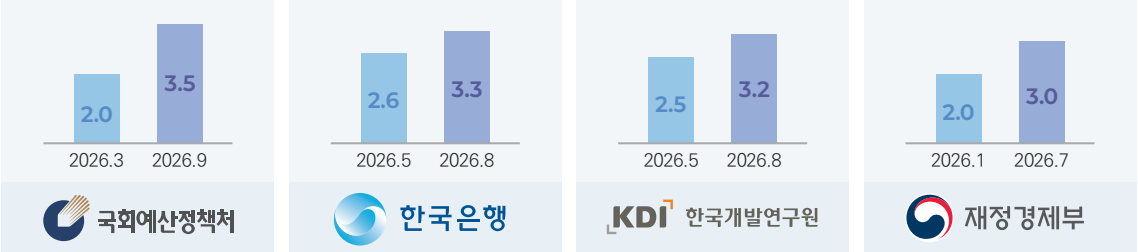


주 2025년은 잠정치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경제통계-국민계정

그러나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와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 주요 기관들은 2026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3%, 3.2%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지난 5월 전망치보다 각각 0.7%p 상향조정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 9월 2026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2026년 3월, 2.0%)보다 1.5%p 상향하여 3.5%로 전망하였다. 이는 2026년 상반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한편, 서비스업이 내수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건설업의 부진도 완화되면서 내수 부문의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3]

1)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한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의미하며, 명목GDP와 실질GDP로 구분하여 산출함. 명목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물량에 그때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일정 시점의 경제규모나 산업구조를 파악할 때 활용되는 지표임
2) 실질GDP는 지수 기준년부터 당해년까지 매년의 개별 재화와 서비스의 가중치 및 물량변화를 반영해 측정한 연쇄 물량지수에 지수 기준년(현재 2020년)의 GDP 금액을 곱하여 가격변화분을 제거하고 산출한 물량측정치로, 경제성장 및 경기변동 등 실질적인 생산활동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활용됨
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202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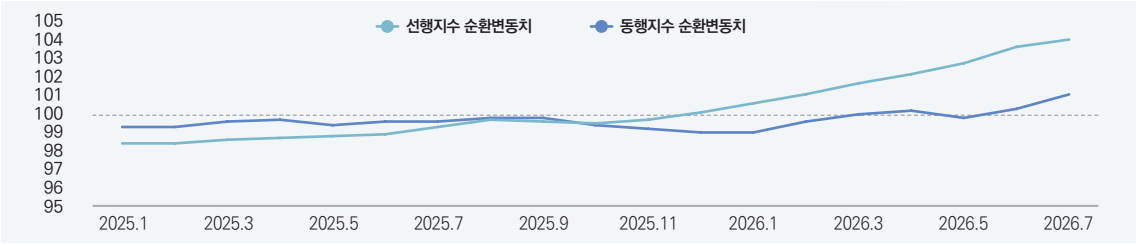
그림 2 국내 주요 기관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경제통계-국민계정 / 한국은행 / 한국개발연구원 / 재정경제부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세는 다른 통계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NABOSTATS에서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기동행종합지수[4] 순환변동치를 확인해 보면, 올해 1월 이후 전월보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며 3월에는 기준선(100)을 넘어서 현재 경기수준이 추세보다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또한, 앞으로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종합지수[5] 순환변동치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경기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주 2026년 5월~7월은 잠정치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경제통계-산업 및 고용-산업 / 국가데이터처

대외거래에서도 2026년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다. 국제원유 가격 상승과 자본재 수입 증가로 수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올해 들어 무역수지 흑자폭이 매우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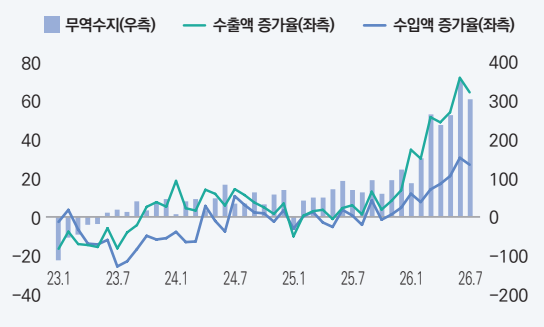
고용 측면에서도 취업자 증가 등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중동전쟁 등 부정적 영향으로 2026년 5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4만명 감소하였으나, 이후 회복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2026년 8월에는 전년 동월보다 18만 4,000명 증가하였다. 다만 취업자 수는 연령별·산업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관련 통계를 함께 살펴보면 경기 회복이 실제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기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수입액, 서비스업생산지수(도소매제외), 소매판매액지수, 건설기성액, 내수출하지수 등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현재의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임

5)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선박제외),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등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경기의 국면 및 전환선을 단기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임

그림 4 수출입액과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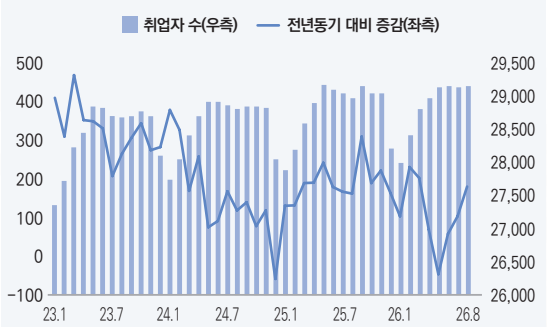
(전년동기 대비, %) (억달러)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림 5 취업자 수 추이

(단위: 천명)



자료 NABOSTATS-재정·경제통계-경제통계-산업 및 고용-고용

NABOSTATS은 앞서 살펴본 경제통계 외에도 물가지수, 산업활동동향, 경상수지, 금리 등 경제지표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 및 OECD 경제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제전망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NABOSTATS의 통계와 관련 연구보고서를 함께 이용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현재 상황과 변화 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심사 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재정·경제 통계

예·결산심사연혁 위원회별 통계

국제통계 (OECD·IMF 등)



www.nabostats.go.kr

NABO 발간보고서 소개(8.1. ~ 10.31.)



NABO 분석보고서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8월 31일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9월 8일
생성형 AI의 노동시장 영향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9월 18일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9월 29일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9월 29일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9월 30일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10월 30일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10월 30일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6~2030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10월 30일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10월 30일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6~2030년):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10월 30일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Ⅰ-Ⅷ	예산분석실	10월 30일

NABO 정기간행물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NABO 인구·고용동향&이슈(제7호)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8월 24일
NABO 산업동향&이슈(제83호)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8월 25일
NABO 대외경제동향&이슈(제7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9월 21일
NABO 경제동향&이슈(제143호)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9월 23일
NABO 산업동향&이슈(제84호)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10월 23일
예산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기획관리관 기획예산담당관실	9월 18일

NABO Focus

보고서명	발간부서	발간일
[NABO Focus 제173호]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8월 6일
[NABO Focus 제174호] 혁신제품 조달 사업 8년, 공공부문 구매·활용 성과는?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8월 14일
[NABO Focus 제175호]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산업도시 조성 사례 및 시사점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8월 27일
[NABO Focus 제176호]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9월 17일
[NABO Focus 제177호]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재정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과제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9월 29일
[NABO Focus 제178호] 유보통합 완성을 위한 남은 과제, 무엇인가?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10월 27일

※ 보고서는 NABO 홈페이지(www.nabo.go.kr)와 열린국회정보포털(open.assembly.go.kr) [보고서 · 발간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우리나라 조세지출은 해마다 증가 추세로, 조세지출 항목의 수는 총 278개이고, 2026년 조세지출액은 80.5조원으로 전망된다. 조세지출액의 GDP 대비 비중은 통계작성이 시작된 1999년 1.4%에서 2026년 2.8%로 2배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를 대부분 도입하고 있지만, 총량 관리 개선을 위해 PAYGO 원칙(미국), 중기 추계(미국, 캐나다), 조세특례 신설 상한(프랑스) 도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성과평가 관련, 네덜란드와 같이 실질적 정비와 연관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평가에서 제시된 후속 조치와 정부의 실제 조치가 다른 경우 정부의 설명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 관리제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조세지출 분류체계부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 관리유형 분류기준을 정비가능성과 연관된 기준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목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의 성격을 가졌으나 조세지출예산서에 미포함된 항목을 최소화하고, 탄력세율 적용 항목은 결산 실적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가 기준조세체계와 구조적 감면 등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재분류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준조세체계와 조세지출의 구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와 관련, 조세지출의 항구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지출 활용도 증가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반복되므로 조세지출 총량관리를 위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세감면율 한도 산식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 성과평가와 관련, 300억원 이상의 신규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포괄적인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전평가가 면제되었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심층평가 및 자료 수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심층평가 방법의 범위 및 평가결과 도출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평가의 결과를 유형화하여 후속 조치에 연계하도록 하는 한편, 후속 조치를 세법개정안에 미반영 시 그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지출과의 통합관리 관련, 현행 12대 분야 분류는 개별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식별하거나 양자의 역할을 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검토할 때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을 고려하였다고 발표하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추가 검증이 불명확하였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최초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16대 분야 및 75개 부문별로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분야별 수준에서 사회복지는 재정지출이 주된 지원수단인 반면, 보건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에서는 조세지출도 전체 정부지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부문별 분석에서는 일부 정책영역에서는 조세지출이 주요 지원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책 수단 간 실질적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국내외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산업 및 입법적 관심이 높다. 특히, 2025년 7월 미국의 「지니어스법」 제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시장 및 금융시장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고정된 금액의 화폐가치에 연동되어 지불 또는 결제 수단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디지털자산 중 하나이다. 디지털 기술 중 하나인 암호화된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중개 기관을 거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존의 법정화폐 거래에 비해 저렴한 거래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다만, 준비자산의 가치나 유동성, 발행사의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면 시장 가격이 준거자산의 가격에서 이탈하는 디페깅(depegging)이나 코인런(coin run)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 이후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및 유통을 위한 「클래리티법안」을 논의 중이며, 유럽은 2023년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미카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1단계 입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제정)에 이어 2단계 입법(가상자산 전반, 논의 중)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거래비용 절감 추정 결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카드 결제에 대한 대체율과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수료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최소 0.37조원에서 최대 5.15조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현재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환율, 주가, 금리 등 다른 금융시장 간 변동성 전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금융시장 간 연계성은 아직 제한적이나 국제분쟁, 달러화 강세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으

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결제 시스템 인프라 개선, 통화 주권 확보를 위한 점진적 제도 개선, 미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자산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대한 보상률의 상한선 및 보상 범위 등 규제, 거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 구축을 위한 중요 스테이블코인 지정과 스테이블코인 시장 안정화 조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생성형 AI의 노동시장 영향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생성형 AI는 업무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또한 성능 개선 속도도 매우 빨라 여러 분야에서 인간 전문가를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화이트칼라 전문직을 포함한 다수의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최근 청년층의 고용 지표 악화도 AI와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서로 엇갈리는 결론에 이르고 있어, 생성형 AI에 대한 직업별 노출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기변동 등의 영향을 엄밀히 통제한 실증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재직자 설문조사를 통해 화이트칼라 중심 57개 소분류 직업의 생성형 AI 활용 현황을 파악하여 직업별 AI 노출도를 구축하였다. 이는 AI에 의한 잠재적 업무 자동화 가능성에 기초하여 산출된 기존 지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생성형 AI가 직업별 노동생산성에 미친 실제 영향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조사 결과 개발자 등 IT 분야 전문직과 이공계열 연구·기술직,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금융·보험 전문가 등이 생성형 AI 고노출 직업으로 파악되었다.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에서는 생성형 AI의 영향과 뒤섞일 수 있는 산업별 경기 요인을 통제하여 ChatGPT 출시를 기점으로 한 생성형 AI 확산의 인과적 영향을 추정하였다. 고용과 채용에 대한 영향 분석에는 상용직·임시직 임금근로자 전수자료에 가까운 「고용행정통계」를, 노동소득에 대한 영향 분석에는 대규모 가계 설문조사인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여 추정 오차의 최소화를 꾀하였다.

분석 결과, AI 고노출 직업의 고용과 채용 및 임금에 대한 생성형 AI의 뚜렷한 인과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분석 대상을 AI발 고용 충격에 특히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20대 청년으로 한정해도 마찬가지였다. 화이트칼라 직업군의 청년 고용과 채용은 ChatGPT가 출시된 2022년 말 이후 생산직·기능직 등 육체노동 중심 직업군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한 것이 사실이나, 화이트칼라 직업군 내에서는 노출도가

높을수록 고용 또는 채용이 더 크게 감소하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화이트칼라 직업에서 청년 고용과 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팬데믹 이후 산업별 경기 변동 등으로 설명 가능하여 생성형 AI의 인과적 영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고노출 직업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도 생성형 AI의 유의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AI가 최근 청년 취업난의 주된 원인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성급할 수 있으며, 다른 구조적 요인들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AI의 급격한 발전 속도와 확산 추세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이며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정부는 AI의 실제 활용과 노동시장 변화를 관찰하여 잠재적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관측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추고, 고용·채용·소득 등에 대한 충격이 확인될 경우 충격의 강도와 영향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26 대한민국 지방재정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지방재정은 주민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기반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에 따라 그 규모와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둘러싼 여건은 재정 규모의 증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고보조사업과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약되고 있으며, 인구구조와 산업기반의 차이는 지역별 세입 여건과 지출 수요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지방재정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의 외형적 규모와 함께 실질적인 재정 여력,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재원배분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2026년에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행정구역 통합 논의 등 지방재정의 구조와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화도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와 지방 간 사무·재원 분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재정 관련 제도와 주요 지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정운용의 실태를 검토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 및 균형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총 3부로 구성된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

서 지방재정 관련 통계자료와 제도를 최신화하였다. 이에 더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구조의 변화, 국고보조사업 증가와 세출분권, 미래대응기금 신설안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 등 핵심 현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금고 예금금리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운용현황, 행정구역 통합 논의 경과 등 최근 이슈를 검토하여 보고서의 시의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부록에서는 '지방재정 연표'를 통해 연도별 지방재정 주요 변화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자치단체별 행정·재정현황과 주요 지표들을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공공기관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행 주체로서,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6년 지정 기준 전체 342개 공공기관의 사업 규모는 2025년 결산 기준 총 824.8조원(정부순지원수입 140.1조원 제외)으로, 우리나라 GDP의 3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총지출 684.1조원의 1.2배 수준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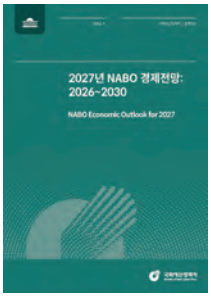
이에 정부에서는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기관별 근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기존에는 비상설 조직이었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상설화되고, 사무조직 역시 위원회 산하 사무처로 확대 개편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기능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9월 초에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상당수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기능 재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반면, 국회의 경우는 정부에 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 재무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되고는 있으나, 최근 쟁점이 되는 기관별 최신 이슈나 사업별 세부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쟁점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정부예산 지원보다는 자체예산의 비중이 높아 상당수 국회의 직접적인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분석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 내년에는 대외수요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의 경기 개선이 수출과 일부 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을 경우 부문 간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글로벌 AI 투자 감속 가능성,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대외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사회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하여 국회의 예결산·법률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을 발간하였다.

제Ⅰ부 「동향」에서는 최근 국내외 경제 및 금융 동향을 담고 있고, 제Ⅱ부 「지출전망」은 실질 국내총생산을 비롯하여 소비, 투자, 대외거래 등의 지출변수와 소비자물가를 전망하고 있다. 제Ⅲ부 「생산전망」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총부가가치를 전망하고 있으며, 제Ⅳ부 「소득전망」은 국민총소득을 비롯한 고용 및 임금에 대한 전망을, 제Ⅴ부 「지속성장」은 잠재성장률, 금리에 대한 전망을 담고 있다.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정부는 8월 3일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과 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를 11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의 형식으로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생산적금융 ISA 도입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근로장려세제와 월세세액공제 확대 및 지방우대 세제지원으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세제 및 가업승계세제를 개편하고, 조세지출 재정전환 등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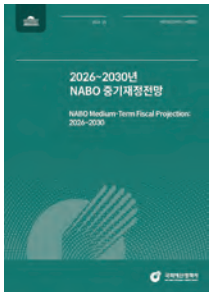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 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14.5조원(2027~2031 누적법 기준)으로 전망하였으며, 세부담 귀

착효과('27~'31 누적법 기준)는 개인 중 서민·중산층 △5.2조원, 고소득자·고자산가 +4.8조원, 법인 중 중소기업 △0.6조원, 대기업 △0.8조원으로 전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27~'31 누적법 기준 13.2조원)와의 세수효과 차이는 1.4조원이며 세목별 차이는 종합부동산세 +1.3조원, 법인세 △1.1조원, 부가가치세 +1.1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활용자료 및 추계 가정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안을 타당성 및 효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6~2030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분석하기 위해 향후 재정 추이를 항목별로 전망하고, 이러한 전망 결과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평가하는 보고서이다.

2026년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지방교육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의 제도 변화, 그리고 재량지출 확대와 같은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총수입은 2026년 784.0조원에서 2030년 1,012.1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2026년 756.5조원에서 2030년 1,035.8조원으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초반에는 국세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총지출보다 커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2029년부터는 국세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보다 커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전반적으로 적자를 보임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2026년 1,413.7조원에서 2030년 1,711.4조원으로 연평균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높은 명목GDP 수준으로 인해 2026년 43.3%에서 2030년 42.5%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0.8%p).

이러한 전망 결과를 2027년도 예산안 등의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현행 수준과 비교하면 총수입은 세법개정안에 따른 양(+)의 세수효과로 인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10.4조원 증가하는 데 그치지만, 총지출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으로 지방이전재원을 포함한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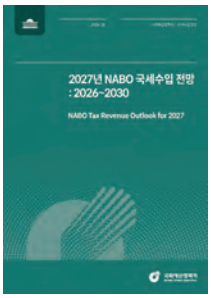
지출이 132.5조원 감소하고 재량지출은 291.4조원 증가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158.9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수준과 비교할 때 중기재정전망의 재정수지는 총수입 증가(2027~2030년 10.4조원)에 비해 총지출 증가(158.9조원)가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7년의 경우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지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가채무 역시 현행 수준에 비해 중기재정전망에서 2028년 이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행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은 2030년 기준으로 40.0%이나, 정책 변화를 반영할 경우 42.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재정전망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유사한 재정경로를 보이고 있음에도 세부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다. 총수입의 경우 NABO 전망이 정부(세수 재추계 기준)에 비해 5년 동안 90.5조원 큰데, 이는 NABO의 국세수입 전망이 정부보다 77.1조원 크기 때문이다. 의무지출은 NABO가 정부보다 79.9조원 크며, 그 차이는 주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5년 합계 51.9조원), 지방이전재원(5년 합계 38.0조원) 등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NABO 모두 전망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점증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 명목GDP 성장을 반영한 결과 국가채무 비율은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50.6%에서 2030년 49.0%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는 같은 기간 43.3%에서 42.5%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향후 전반적으로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높은 증가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세수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성장동력 확보 등을 위한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규모가 큰 일부 의무지출에 대해 제도 개편을 통해 증가 추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중기재정 운용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전망기간 후반에 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을 과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국세수입 증가를 전제로 하는 지출 확대 계획이 재정위험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2027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6~2030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국세수입을 593.7조원으로, 2026년 전망(480.5조원) 대비 113.2조원(2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글로벌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반도체 업종의 기업 영업실적 호조 등으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83.8조원 증가하면서 국세수입 증가세를 견인하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임금상승 등 소득여건 개선, 내수회복 등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전년 대비 각각 29.6조원, 5.0조원 증가하면서 국세수입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 국세수입 전망은 정부 예산안(584.4조원)보다 9.3조원(1.6%)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반도체 수출 호조 및 민간투자의 확대 등을 높게 전제하여 명목GDP 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높게 전망한 데 주로 기인한다. 세목별로는 주요 세목인 법인세(5.4조원), 소득세(1.7조원), 부가가치세(1.9조원) 등에서 주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2026~2030년) 국세수입은 2026년 480.5조원에서 2030년 673.3조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은 정부의 중기 운용계획과 비교하여 5년간 총 77.1조원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중기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26년 및 2027년의 국세수입 전망의 차이와 양 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 차이에 주로 기인한다. 특히 2028년 이후 명목GDP 성장률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보다 높게 전망함에 따라 양 기관의 국세수입 전망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2027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분석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7년 국세감면액은 104.9조원으로 2026년 87.0조원 대비 17.9조원(20.6%)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조세지출 규모를 정부 전망보다 2.6조원(2.5%) 낮은 102.3조원으로 전망하였다. 2027년도 조세지출 수혜의 경우 투자·연구개발 관련 감면 확대에 따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기업에 대한 귀착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조세지출제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정부는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 선별적·효율적 지원 및 유사 재정사업과의 통합을 위해 17개 조세지출 항목의 재정지출 전환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재정지출 전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환 전후의 수혜 변화와 정책성과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조세지출 정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성과평가와 관련, 예비타당성평가 면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심층평가에서도 정책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을 제안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를 축소하고,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특례는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 분류체계의 경우, 그동안 기준조세체계가 부재하여 조세지출의 판단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관리대상 분류체계 간 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조세지출 정비 및 관리의 실효성이 제약되었다. 조세지출의 범위와 유형별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분류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관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 전망오차와 관련해서는 개별 항목의 전망방법과 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전망오차를 단순 합산하는 경우 전망의 정확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전망오차의 측정·관리 방식을 보완하고, 개별 항목의 전망방법 및 산출 근거에 관한 정보 제공과 조세지출결산서의 사후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세지출예산서는 분야별 조세지출 규모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통합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로 우선 검토영역을 선별하고, 해당 영역의 관련 조세지출과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정책목적, 수혜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비교하여 정책수단 간 역할분담과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6~2030년):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및 재정정책 평가를 위한 핵심 참고자료이며, 이에 수록된 주요 재정계획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는 지출 규모가 크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지출 및 경직성 지출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 지출이 총지출의 약 50%를 차지하며, 계획 기간 두 분야의 의무지출 비중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의 71% 이상, 교육 분야 지출의 76% 이상).

이에 본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 및 자체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수록된 보건·복지·고용 및 교육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 관련 재정사업과, 주요 복지분야 의무지출, 교육재정 관련 사업의 정부 중기지출 전망에 적용된

추계 가정과 산출근거, 정책변화에 따른 재정영향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재정사업에서 정부계획과 NABO 전망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부 사업은 중기지출전망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소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부 사회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위험과 중장기 재정부담 증가, 복지제도 개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와 지원 대상 간 형평성 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의 경직성 경비반영 문제와 시·도교육청 재원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 중기 재정운용상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기재정전망의 정확성과 일관성 제고, 제도 변화에 따른 재정소요의 중기계획 반영, 재원배분의 합리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재정운용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Ⅰ–Ⅶ

예산분석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026년 8.1%에서 20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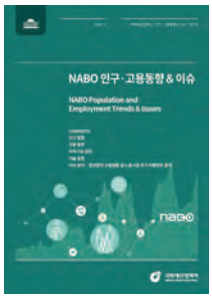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NABO 정기간행물

NABO 인구·고용 동향 & 이슈 (제7호)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인구·고용동향과 지속가능성장

출생아 수는 증가세가 이어지나 혼인 감소로 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충청권 일부의 순유입 등 인구이동의 지역별 차별화도 지속되고 있다. 7월 주민등록인구는 5,109만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0.1% 감소했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22.0%로 상승하였다. 5월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2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혼인건수는 감소로 전환되었다. 6월 이동자 수는 48.1만명으로 소폭 증가한 가운데 경기·인천은 순유입, 서울·부산은 순유출을 지속하였다.

고용은 총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며 개선되었으나, 제조업·건설업과 청년층 고용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7월 취업자 수는 10.8만명 증가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제조업(-6.8만), 건설업(-5.7만)은 감소를 지속하고 20대 고용률은 남녀 각각 1.5%p, 1.6%p 하락하였다. 실업률은 2.6%, 청년 실업률은 6.8%로 상승했으며, 6월 채용은 16.4만명 늘고 5월 임금은 1.7%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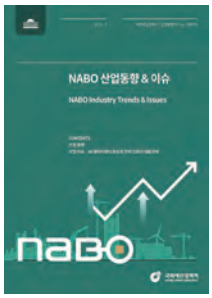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목표 생활 부문을 점검한 결과, 상·하수도 보급은 개선되었으나 물 이용 효율성과 지역 격차는 과제이며(SDG6), 에너지효율·탄소집약도는 장기 개선세가 최근 정체되었다(SDG7). 제조업·연구개발 경쟁력은 높으나 제조업 고용비율은 하락 중이며(SDG9), 대중교통·대기질은 양호하나 생활 인프라의 지역 격차가 존재한다(SDG11). 재생에너지 설비는 확대되었으나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폐기물 재활용 성과도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SDG12).

이슈 분석: 청년층의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초기 이행경로 분석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최근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실제 고용구조 간 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초기 경력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분석 결과, 청년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은 첫 일자리의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화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근로조건뿐 아니라 입직 이후의 경력전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방향은 단순 취업·근속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 입직 이후 숙련·경력의 인정, 중소기업 내 경력성장, 계약종료·이직 과정의 고용연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83호)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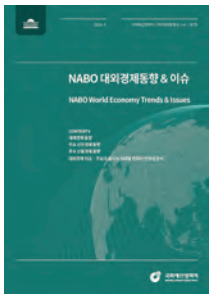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의 장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조업의 수출 호황과 금융보험업, 도소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의 생산 확대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 6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4.2% 증가하였는데,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4.0%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이 5.3%, 제조업이 6.1% 증가한 데 기인한다. 13대 산업의 수출은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SSD 수요 급증 등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2026년 7월 812.5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75.5% 증가하였다. 2026년 7월 유가는 중동발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OPEC+의 증산 확대로 배럴당 79.8달러(전년동월 대비 15.3%)로 전월 대비 2.3% 하락하였다. 2026년 7월 비철금속가격지수도 주요 광산의 생산 차질과 원료 공급 부족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7.4% 상승하였으나 일부 품목의 공급 정상화와 수요 둔화 등으로 전월 대비 2.8% 하락하였다. 2026년 7월 곡물가격지수도 미국 중서부의 고온·건조에 따른 작황 우려와 흑해지역의 수출 차질 우려 등으로 옥수수와 소맥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8.3% 상승하였다. 2026년 6월 배출권(KAU25) 거래량은 1,135.8만톤으로 전월 대비 161.4% 증가하였으나 종가는 톤당 22,800원으로 7.1% 하락하였다.

산업이슈 분석: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 인프라 대응과제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AI 데이터센터가 국가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인프라 확보가 주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현안에서는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 및 구축계획을 살펴보고, 메가프로젝트의 잠재적 전력사용량을 추정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 전망과 비교하였다. 구축 이후 설비이용률이 단계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전력사용량은 2031년 약 58.9TWh, 전체 사업이 안정화되는 2037년 이후 약 128.9T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기업의 장기 구축계획에는 사업 구체화 정도가 서로 다른 잠재수요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두 확정수요로 반영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수요의 확실성과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전력수요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이에 맞춰 발전설비를 적기에 확보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과 전력망 확충 일정을 연계하여 전력수급계획과 전력망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 (제7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대외경제동향

세계경제는 AI 관련 기술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술경기 수혜 정도와 내수 여건에 따라 국가별 성장세가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민간소비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투자와 대외수요 둔화로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었다. 반면 유로지역은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개선되고 있으며, 일본은 내수 부진과 고유가 영향으로 회복세가 제한되고 있다. 주요 신흥국 가운데 인도와 베트남은 투자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내수 회복 지연, 브라질은 소비와 수출 둔화, 러시아는 산업생산 정체와 투자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제약되고 있다. 한편,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재차 고조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국채 금리가 국가별로 차별화된 가운데 글로벌 주가는 상승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8월 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국채 수급 개선과 추가 긴축 우려가 상쇄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유로존과 일본의 장기금리는 물가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다. 글로벌 주가는 AI·반도체 관련 기술기업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모두 상승하였으며, 달러인덱스는 미국 경제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하락하였다. 국제상품가격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이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로 상승하였다.

대외경제 이슈: 주요국 증시의 시대별 변화와 연계성 분석

최근 주요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반도체·소프트웨어·온라인 관련 기업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빠르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와 주요국(미국, 일본, 중국, 영국) 증시 간 변동성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변동성의 평균 37.48%가 다른 국가 증시로부터 전이된 변동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증시의 변동성은 자체 요인의 영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충격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국가 간 변동성의 연계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 들어 빠르게 상승하며 재평가되고 있으나, 국내외 변동성 확대 요인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외 변동성 위험 요인으로 주요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국내 변동성 위험 요인으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비중이 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143호)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이 꾸준히 회복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하고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기준선을 넘어섰으나, 중동전쟁의 여파로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2026년 7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은 0.2% 증가, 서비스업은 1.3% 감소하였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8p 증가하였다. 소매판매액은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모두 감소하여 전월 대비 2.4% 감소하였다. 건설기성액은 전월 대비 1.1% 감소, 설비투자는 7.5% 증가하였다. 6월 중앙정부 재정지출은 총지출 누계 기준 전년 대비 35.8조원(9.9%) 증가하였다. 8월 무역수지는 347.5억달러 흑자이며, 수출은 전년 대비 68.7% 증가하였다. 8월 소비자물가는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다. 8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79%를 기록하였다. 8월 KOSPI지수는 일별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월말 대비 상승하며 6,820.0을 기록하였다. 6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8조원 늘어난 1,35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7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5% 상승, 주택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8.2% 감소하였다. 8월 말 원/달러 환율은 1,376.5원으로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변동성은 축소되었다. 8월 말 외환보유액은 전월 대비 143.3억달러 증가한 4,422.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경제이슈 분석: AI 투자 확대와 국내 설비투자 리스크 점검 (하이퍼스케일러 실적발표문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생성형 AI의 상용화 이후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유례없는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의 투자 인식과 심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분기별 실적발표문을 텍스트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개사 실적발표에서 AI 투자에 관한 리스크 언급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만 2026년 들어서는 그 비중이 크게 낮아져, AI 투자 우려가 수익성과 성과 중심의 언급으로 이행하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AI에 대한 논의와 불확실성이 집중된 가운데, 낙관적 심리도 공존하며, 투자 축소를 의미하는 발언도 관찰되지 않았다.

AI 투자 확대 시기에 우리나라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과 같은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일부 업종에 대한 집중 위험을 완충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투자를 주도하는 하이퍼스케일러 등 빅테크 회사의 투자계획과 재무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투자 사이클 전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필요가 있다.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84호)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산업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주요 제조업의 수출 호조, 금융거래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수요 증가, 건설업의 부진 완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26년 8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1.9%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2.4%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 생산이 4.6%, 건설업 생산이 1.3% 증가한 데 기인한다.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것은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조업일수가 감소하면서 생산이 전년동월 대비 29.4%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13대 산업의 수출은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장치 등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수출액이 2026년 9월 1,038.4억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103.9% 증가하였다. 2026년 9월 유가는 중동지역 원유 공급 차질 우려와 사우디 송유관 가동 중단 등으로 배럴당 102.3달러(전년동월 대비 53.9%)로 전월 대비 21.2% 상승하였다. 2026년 9월 비철금속가격지수도 주요 구리 생산국의 공급 차질과 중국의 재고 감소 및 비축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0.4% 상승하였다. 2026년 9월 곡물가격지수도 흑해 지역의 곡물 수출 차질과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5.8% 상승하였다.

산업이슈 분석: 최근 건설비용 상승 요인 검토

건설업 생산은 2026년 8월 전년동월 대비 1.3% 증가 전환하기까지 감소세가 27개월 연속 이어지며 부진이 지속된 상황이다. 국가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건설업은 경제 파급효과가 커, 건설업 경기의 부진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건설경기 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건설비용 상승의 구조와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2022년 이후 재료비, 노무비와 같은 직접비의 증가는 건설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재료비의 영향이 더 큰 상황이다. 재료비는 고비용 생산 구조의 고착화로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실질적인 노무비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금리가 인상되며 금융비용과 같은 간접비 또한 증가하여 자금조달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비용의 상승은 일시적인 경제 현상에 더하여 구조적 변화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15권 제3호

예산정책연구 논문 소개

발간일 2026년 9월 18일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하고자 NABO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 본문은 「예산정책연구」 제15권 제3호에 수록된 논문초록으로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의 단절적 변동과 예산결정과정의 분석: 2024~2026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본 연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대한민국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과정에서 발생한 급격한 삭감과 증액을 단절적 균형이론(PET)과 옹호연합모형(ACF)을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 1991~2026년 R&D 예산증감률에 대한 Shapiro-Wilk 정규성 검정은 유의수준 5%에서 정규성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L-첨도, 정부총지출 통제 잔차분석, 사전구간 및 성숙기 기준 표준화 충격분석, 비모수 순위분석을 종합하면 2024년 삭감은 전체기간 최저값이자 명백한 음의 충격이며, 2026년 증액은 전체기간 증감률 최고치는 아니지만 총액 기준 역대 최대이자 성숙기 기준 강한 양의 충격으로 해석된다. 질적 분석은 이러한 변동이 최고권력자의 'R&D 카르텔' 담론, 국회의 정책중개, 글로벌 AI 기술경쟁, 정권교체라는 외부사건과 결합하여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증거기반정책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행정데이터의 한계와 정책효과 재평가

저자
심재용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본 연구는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TNR)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정책성과 지표로 활용되는 개체수 추정치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길고양이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SIR 모형을 구성하여 개체수 변화를 추정하고, 정책변수와 현상지표 간 관계를 시계열 회귀분석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SIR 모형은 길고양이 개체수의 지속적 증가를 예측한 반면, 서울시 발표값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예산투입이나 중성화

실적과 같은 정책변수는 길고양이 개체수와 정합성을 나타냈으나, 로드킬 처리 건수, 민원량, 유기동물보호센터 입소량 등 현상지표와의 관계는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길고양이 개체수 지표가 실제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정책 집행 구조와 연동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우즐 효과(Woozle effect) 관점에서 해석하며, 증거기반정책에서 데이터의 구조적 검증 필요성을 제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일 수 감소가 여성 고용에 미친 영향

저자
박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등교일 수 감소가 여성의 노동 공급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별로 시행된 등교 제한 조치는 개별 가구의 선호나 전략적 행동과 무관한 외생적 충격(exogenous shock)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자녀 돌봄 부담 증가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식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등교일 수 감소는 여성 고용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막내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노동 공급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거나 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자립도와의 교차항을 포함한 분석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이러한 고용 충격이 완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효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집단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감염병 위기가 돌봄 부담을 통해 여성 노동 공급에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며, 그 영향이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기관 분류기준의 변별 타당성과 유형변경의 인과효과

저자
엄기중
국립순천대학교 회계학전공 부교수

본 연구는 2022년 공공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정책충격으로 활용하여 분류기준의 변별 타당성과 유형변경의 재무행태 인과효과를 분석한다. 2020~2024년 ALIO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중차분(DID)과 사건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자산·수입 기준은 사실상 포괄적이어서 정원 기준이 단일 결정요인으로 작동하고, 유형변경 기관에서 정원과 재무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약화되었다. 반면 양방향 고정효과 DID와 PSM 결합 DID에서 유형변경의 인과효과는 전 종속변수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규모 기준의 변별력 부재와 거버넌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합충족 요건 방식 도입을 통한 분류기준 재설계와 내부 견제기능 강화, 회계기준 및 감사절차 마련, 자원배분 결정 사전협의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퇴직금 유보적립금 추정과 퇴직급여 장기전망

제1저자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신저자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내에 유보되고 있는 퇴직금의 유보 적립금을 장기 추정하고, 이를 퇴직연금 적립금과 합산하여 우리나라 전체 퇴직급여의 적립금 규모를 평가하였다. 만기퇴직모형과 연령별퇴직모형으로 구분하여 유보적립금을 산출하였는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한 전체 퇴직급여 유보적립금은 만기퇴직모형에서 2039년, 연령별퇴직모형에서 2046년에 국민연금 기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퇴직연금만을 고려했을 때보다 각각 11년, 4년 앞당겨진 결과로, 퇴직급여 자산 규모가 과소평가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퇴직급여 통계 체계 정비, 퇴직금의 퇴직연금으로 전환, 연금 수령 유도,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내 퇴직급여 위상 재정립, 퇴직연금 투자수익률 제고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립재정기구 유형과 정치·제도적 견제 수준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EU 26개국을 중심으로

제1저자
김애진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이상엽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본 연구는 EU 26개국의 2015~2023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독립재정기구 유형과 정치·제도적 견제 수준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독립재정기구의 기능적 강도와 정치·제도적 견제 수준을 별도로 다루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독립재정기구를 조직적 위치와 예산과정에서의 활용 방식에 따라 FC형, PBO형, Audit형, Mixed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독립재정기구의 기능적 강도와 정치·제도적 견제 수준 간 상호작용을 검토하는 한편, 정치·제도적 견제 수준과 구조적 재정수지 간 관계가 독립재정기구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구조적 재정수지의 동태성과 제도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System GMM을 적용한 결과, 독립재정기구의 기능적 강도와 정치·제도적 견제 수준 간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기준범주인 FC형 국가에서는 정치·제도적 견제 수준과 구조적 재정수지 간 양(+)의 관계가 제한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기초재정수지와 경기조정재정수지를 대체 종속변수로 활용한 강건성 분석에서도 유지되었다. 다만 유형별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독립재정기구 유형에 따라 정치·제도적 견제 수준과 구조적 재정수지 간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재정기구의 효과를 기능적 강도만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의 재정 거버넌스 설계에서도 독립재정기구의 조직적 위치와 재정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정치·제도적 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NABO NEWS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3주년 기념식 개최



NABO는 지난 10월 19일(월) 설립 23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예산정책처장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 조정식 국회의장 격려사, 공로패 수상 의원의 수상소감, 축사, 축하 떡 케이크 커팅 순서로 진행됐다.

이신우 국회예산정책처장 취임식





제12대 이신우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의 취임식이 지난 10월 30일(금) 열렸다. 신임 처장은 공모절차를 거쳐 10월 30일(금)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같은 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더 많은 소식은 www.na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NABO는 지난 11월 2일(월)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해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은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임명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정태호·유상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이정혁 홍익대학교 교수와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NABO는 지난 11월 9일(월)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주요 현안과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한석현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의 발제, 오기형·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및 최한수 경북대학교 교수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FISCAL STORY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제 용어 사전:
이월·불용·세계잉여금
108

풀어쓰는 최신 트렌드 경제: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과 새로운 소비경제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언론학(경제저널리즘) 박사
110

세계 경제를 바꾼 역사적 사건:
유로화 출범과 글로벌 통화질서의 변화
임성택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114

대중문화 속 재정·경제 이야기:
1분이 만드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
쇼폼 드라마의 경제학과 정책 과제
김치호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18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제 용어 사전

이월·불용·세계잉여금



그림 한상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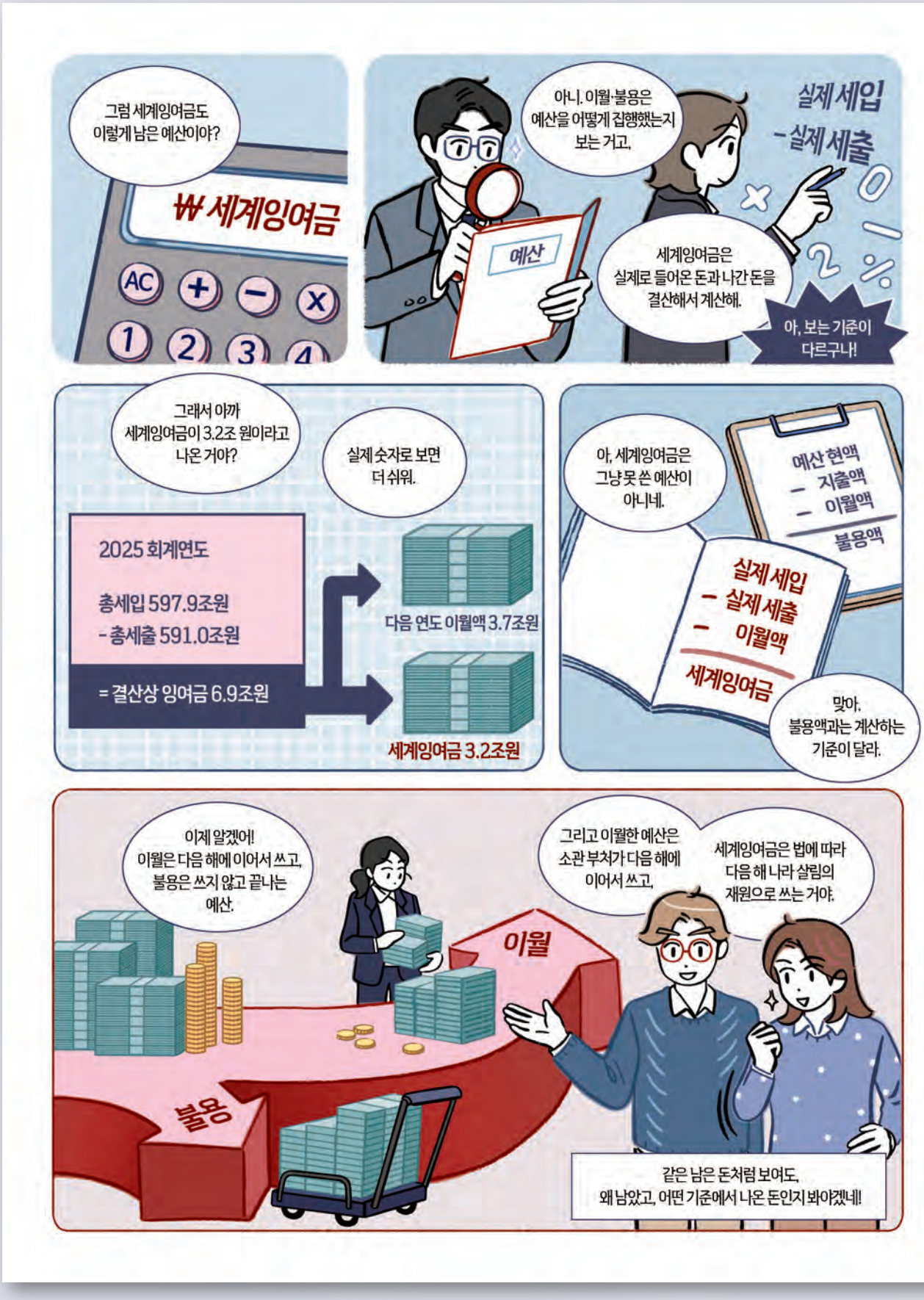











그럼 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남은 예산이야?
₩ 세계잉여금
AC
아니, 이월·불용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보는 거고,
예산
실제 세입 - 실제 세출
세계잉여금은 실제로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결산해서 계산해.
아, 보는 기준이 다르구나!
그래서 아까 세계잉여금이 3.2조 원이라고 나온 거야?
실제 숫자로 보면 더 쉬워.
2025 회계연도
총세입 597.9조원
- 총세출 591.0조원
= 결산상 잉여금 6.9조원
다음 연도 이월액 3.7조원
세계잉여금 3.2조원
아, 세계잉여금은 그냥 못 쓴 예산이 아니네.
예산 현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실제 세입 - 실제 세출 - 이월액 = 세계잉여금
맞아, 불용액과는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
이제 알겠어! 이월은 다음 해에 이어서 쓰고, 불용은 쓰지 않고 끝나는 예산.
그리고 이월한 예산은 소관 부처가 다음 해에 이어서 쓰고,
세계잉여금은 법에 따라 다음 해 나라 살림의 재원으로 쓰는 거야.
이월
불용
같은 남은 돈처럼 보여도, 왜 남았고, 어떤 기준에서 나온 돈인지 봐야겠네!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과 새로운 소비경제

글.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언론학(경제저널리즘) 박사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특징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압축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진 2000년대 초반 이후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며 살아왔다. 그 결과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균수명 증가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맞물려 고령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6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112만 5,000명으로 총인구의 21.6%를 차지한다. 이런 추세라면 4년 뒤 2030년(1,298만명)에 총인구의 25%에 이르고, 2036년(1,567만명) 총인구의 30%, 2050년(1,891만명) 총인구의 40%를 넘어서게 된다(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이처럼 고령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시장의 무게중심이 시니어(senior) 계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시니어 계층이 주목받는 것은 단순히 수적으로 많은 인구집단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왕성한 문화·소비 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들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함에 따라 관련 산업과 새로운 직업,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액티브 시니어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버니스 뉴가튼

심리학과 교수가 1974년 제시한 개념이다. 뉴가튼 교수는 55~75세의 비교적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교육 수준과 사회·정치 참여도가 높은 집단을 'Young-Old(젊은 노인)'라고 구분했다. 국립국어원은 2020년 새말 모임에서 액티브 시니어를 '활동적 장년'으로 다듬었다.

우리나라에서 액티브 시니어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개시된 2010년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보다 인구 수도 많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퇴직이 본격화한 2024년 이후 더욱 각광받고 있다.

6.25전쟁 직후 태어나 산업화·고도성장의 주역으로 활동한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약 705만명으로 총인구의 13.7%다. 그 이후 10년 사이 태어나 경제적으로 발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고등교육을 더 많이 받고,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은 정보화·세계화 세대인 2차 베이비부머는 약 954만명으로 총인구의 18.6%다. 1차·2차 베이비붐 세대는 총 1,659만명으로 총인구의 32.3%에 이른다.

표 **1·2차 베이비붐 세대 비교**

	1차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
출생연도	1955~1963년생	1964~1974년생
2026년 연령	63~71세	52~62세
인구 규모	705만명	954만명
인구 비중	13.7%	18.6%
특성	산업화 세대 은퇴·고령인구 진입	정보화 세대 현역 경제활동, 은퇴 준비
주요 문제	노후 소득, 건강, 자산 활용	고용 지속, 자산 축적, 노후 준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은행

'실버산업'에서 '액티브 시니어 소비경제'로!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올해 63~71세로 이미 대부분 65세 이상 노년층에 진입했다.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올해 52~62세로 앞으로도 8년 동안 계속 법정 정년(60세)에 도달해 퇴직한다. 따라서 2024~2034년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겹치는 시기로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소비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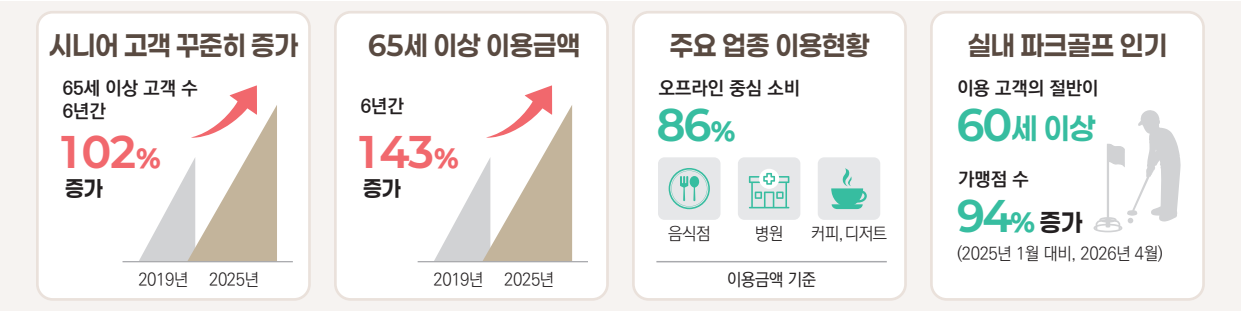
액티브 시니어는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왕성한 소비활동을 하고, 가족만큼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며 스스로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액티브 시니어는 이미 소비시장의 주요 고객층으로 적잖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KB국민카드가 2019~2025년 6년간 신용·체크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시니어 고객 수와 카드 이용금액이 두 배 넘게 급증하며 소비 영향력이 커졌다. 6년 사이 65세 이상 고객 수는 102%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카드 이용금액은 143% 증가했다. 전체 고객의 평균 이용금액 증가율(34%)의 4.2배에 이르렀다.

최근 1년 소비 패턴을 보면 시니어 고객은 오프라인 소비 비중이 86%로 65세 미만 고객의 오프라인 비중 70%보다 높았다. 카드 이용 건수 기준 음식점이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병원·약국 25%, 커피·디저트 10% 순서였다. 이용금액 기준으로는 병원·약국 업종이 38%로 건강관리 관련 지출이 컸다. 시니어 소비가 병원비와 약값에 머물지 않고 외식, 커피와 베이커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가활동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다. 실내 파크골프 이용 고객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이 48%였다. 은퇴 전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실외 중심 스포츠였던 파크골프가 실내 여가 활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덩달아 관련 시장도 급성장했다. 올해 4월 기준 실

그림 1 커지고 활발해진 시니어 소비



자료 KB국민카드, 시니어 소비 데이터 분석

내 파크골프 가맹점은 약 500개로 지난해 1월 대비 94% 증가했다.

'건강하게 오래 살자' 문화·건강·여가 소비가 일자리 만든다

은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배우며 여행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면서 일자리 시장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가 과거 고령층과 달리 일·소비·여가·자기 계발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새로운 소비자로 문화, 여행, 뷰티 등 다방면에 관심이 있는 만큼 해당 직업군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5월 발간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 보고서에서 액티브 시니어의 부상을 향후 직업 세계를 바꿀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고령층이 더 이상 복지와 부양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소비시장, 노동시장,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주류 세대로 떠올랐다는 분석에서다.

액티브 시니어가 늘면서 문화·건강·여가 분야 직업군도 더불어 커질 전망이다. 은퇴 이후 전시, 공연, 박물관, 도서관을 찾는 고령층이 늘면서 학예사, 큐레이터, 문화관광해설사, 도서관 사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등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

음악과 공연 분야도 각광받는 대상이다. 7080 가요 붐과 트로트 열풍에서 보듯 5060세대는 이미 대중문화의 주요 소비층이다. 트로트뿐만 아니라 1970~1990년대 대중음악, 합창, 악기, 생활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시니어 문화 소비가 확대되면서 공연 기획, 음악강사, 시니어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건강 분야에서는 시니어 전문 트레이너, 재활운동 지도사, 생활체육 강사,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웰니스 프로그램 기획자 등이 유망 직업으로 꼽힌다. 고령층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중시하기 때문에 근감소증 예방, 관절 보호, 만성질환 관리에 초점을 맞춘 운동 지도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뷰티·패션·관광 분야 일자리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은퇴 이후에도 자기관리에 신경 쓰고 여행을 즐기는 시니어가 늘면서 피부관리, 네일, 체형관리, 시니어 패션, 웰니스 여행, 문화체험 여행 관련 직업군이 확대될 것이다.

향후 30년간 확대될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 파워

과거의 시니어는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 고령층으로 돌봄과 부양의 대상으로 인식됐다. 이와 달리 오늘날의 액티브 시니어는 신체·정신·경제·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왕성한 소비주체로 거듭났다.

전통적인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과 다른 액티브 시니어가 새로운 소비주체로 부상한 데에는 여러 인구사회학적·경제적 요인이 작용했다. 평균수명 증가는

생애주기의 변화를 가져왔다. 액티브 시니어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면서 경제활동 기간이 연장됐다.

액티브 시니어 계층이 소유한 자산 등 경제적 여유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이 내 집을 마련한 30~40대 시절 우리나라 집값은 상승 초기라서 이전·이후 어느 세대보다 자산을 빠르게 축적했다.

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줄 아는 첫 시니어 세대다. 액티브 시니어가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던 1990년대에 PC가 대중화되고 인터넷이 보급됐다. 빠른 디지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디지털 수용성이 높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적다. 그 덕분에 고기능 가전과 정보기술(IT) 기기도 곧잘 사용한다. 커피믹스를 즐겨 마시던 시니어들이 커피머신을 구입해 '나만의 홈카페'를 차리는 식이다.

이들은 가족 중심적인 과거 시니어 세대와 달리 가족과 개인의 가치를 함께 중시한다. 은퇴 이후 노년기를 '자아실현기'로 인식해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긴다. 외모 관리에 신경 쓰면서 뷰티 케어 기기를 구매해 사용한다. 액티브 시니어 시장에서는 이제 노인용 '실버 제품'보다 '젊은 감각의 시니어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기업들은 고령 세대 소비자를 겨냥해 제품과 서비스를 재편하는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에 들어갔다. 시니어의 니즈에 맞춘 주거(시니어 레지던스)·식품(건강식, 고단백식품), 연금·자산관리, 패션, 헬스케어, 인공지능(AI) 건강 관리, 가사·주택관리 서비스 시장 등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거대 유권자 집단인 중장년의 인생 2막 설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 개설에 열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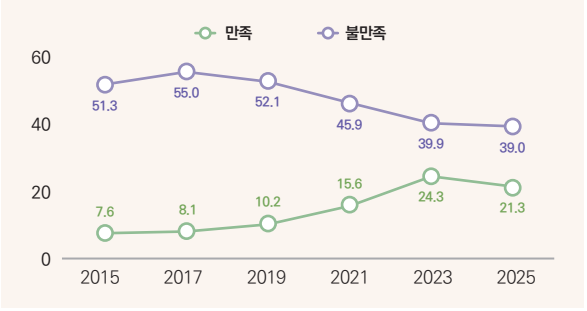
시니어 계층의 소득과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추세다.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5~2025년 10년 사이 소득에 만족하는 고령자 비중은 7.6%에서 21.3%로,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비중은 9.8%에서 17.9%로 각각 상승했다.

액티브 시니어 시장은 해당 연령대 인구 증가와 구매력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향후 30년이 액티브 시니어의 전성기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학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저축과 자산 축적이 늘어나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현상을 '두 번째 인구배당(second demographic dividend)'이라고 한다. 새로운 소비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인 액티브 시니어의 현주소를 파악해 활용하는 기업 마케팅 전략과 정부 정책이 요구된다. 액티브 시니어의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기업·정부·가계 등 경제주체들 모두 액티브하게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자. 아울러 'AI 건강관리 + 스마트홈 + 돌봄 로봇 + 시니어 주거' 패키지 등 한국형 고령친화 기술과 제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성장 동력으로 삼자.

그림 2 고령자의 소득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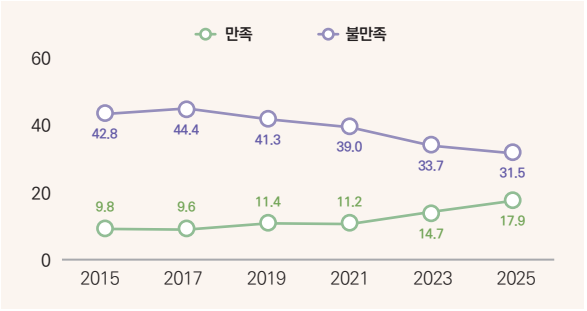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그림 3 고령자의 소비 만족도

(단위: %)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유로화 출범과 글로벌 통화질서의 변화



글. 임성택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2002년 새해 첫날부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각지에서 시민들이 ATM 앞에 몰려들었다. 바로 새로 등장한 화폐 유로(Euro, €)를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프랑과 마르크처럼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던 통화들이 단일통화로 대체되는 사건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유럽은 왜 역사적 실험을 스스로 자처했을까?

© Shutterstock.com /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 옛 본부와 유로 조형물

유로화 출범의 배경

1971년 닉슨쇼크로 인해 전 세계는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 통화가 고정된 환율을 유지하던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하면서, 세계인들은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었다. 각국의 재무 담당자들은 고정환율제를 되살리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측과 제어가 불가능한 국제적 자본 이동의 확대로 실패하고 말았다. 유럽 국가들은 대안적으로 공동의 환율 협정을 맺고 유럽 국가들 간의 환율을 허용된 구간 내에서만 움직이도록 하는 '스네이크 시스템'을 고안했지만, 오일쇼크의 여파로 실패하고 만다. 당시의 교훈을 통해 유럽 각국들은 '환율 협정은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하므로 차라리 동일한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환율변동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자'는 단일통화 사용의 필요성을 통감하게 된다.

경제학자 먼델은 단일통화 사용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최적통화지역(Optimal Currency Area)'이란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영구적인 고정환율을 사용하는 것이 이로운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좋은 사례가 바로 미국으로, 하나하나가 웬만한 국가에 버금가는 50개의 주(state)가 각자 통화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달러라는 공통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서로 다른 두 경제권이 같은 화폐단위를 사용할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는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며, 재화 거래의 복잡성이 최소화된다. 따라서 각국의 산업들은 타국 기업과의 경쟁에 더 크게 노출되지만, 그만큼 시장확대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 철강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산업의 경우 이 점이 두드러진다. 또 경제권의 규모가 커지면 특정 국가의 경제적 충격이 역내에서 흡수되어 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단일통화 사용의 이점은 미국의 사례처럼 교류가 많은 지역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리히텐슈타인이 스위스 프랑을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로 언어와 문화가 상이하거나 각자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한 국가 사이에서는 교류가 적다. 유럽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언어, 문화, 제도적 차이점이 더 크다. 게다가 단일통화의 사용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개별 국가 단위의 통화정책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계에서는 EU는 최적통화지역이 아니라는 회의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경제통합이 EU를 더욱 최적통화지역에 가깝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합은 정치적으로 큰 상징성을 가졌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유럽인들에게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중요했으며, 긴밀한 경제적 통합은 평화 보증수표로 여겨졌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커져가는 국가에 대해 유럽이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1979년 유럽경제공동체(EEC, 현 EU)는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를 출범시켰다. EMS는 역내 통화 안정을 목적으로 했으며, 가맹국들 통화를 가중치에 따라 담은 통화바스켓을 설정하여 일종의 가상적인 신규 통화(European Currency Unit, ECU)를 만들었다. 그리고 ECU를 바탕으로 회원국 간 상호 환율(중심환율)을 설정한 뒤, 실제 시장 환율이 허용된



© Shutterstock.com / 영국 런던시의 로열익스체인지 및 뱅크오브잉글랜드

변동폭을 벗어나지 않도록 방어할 의무를 부과했다. 초기에 허용된 변동폭은 ±2.25%였지만, 약세 통화국의 참여를 위해 이탈리아 리라 등은 ±6%까지 허용하였다. 환율이 경고수준에 도달할 경우, 해당 국가는 금리의 변경이나 외환시장 개입을 권고 받았다. 만약 한계까지 도달할 경우에는 양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의무화되었다.

단일통화 출범을 위한 난관

1992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체결된 조약으로 이듬해 유럽연합(EU)이 공식 출범하였다. EU 가입국들이 경제, 외교 및 안보, 치안 측면에서 공동의 정책을 사용하는 3대 기둥 구조가 도입되었으며, 무엇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로화 도입계획이 수립되었다. 독일은 화폐가치 안정을 유지해왔고 독일인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마르크화를 포기하는 셈이었지만, 동-서독 통일로 인한 주변국들의 두려움과 견제를 해소하고자 이를 받아들였다. 대신 EU 가입국들에게는 방만한 재정 사용으로 EU 전체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 정부부채도 GDP의 60% 이내로 제한)이 적용되었다.

계획대로 가맹국 사이의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90년대 말까지 통화 통합이 이루어질 예정이었다.



ⓒ Shutterstock.com / 벨기에 유럽연합 본부

그러나 개별 국가의 경제상황이 유럽 전체 상황과 상이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1990년의 독일 통일은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동독 지역 재건사업에 대해 대규모의 재정지출을 시행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반면 다른 유럽국가들은 경기침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독일과 반대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했다. 그러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독일 마르크화로 인해 약속한 환율 유지 의무를 위해서는 억지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은 투기자금들의 좋은 공격목표가 되었다.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곧 환율을 절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런 상황이 올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향(파운드 및 리라 매도)으로 투자했다. 이러한 흐름은 목표 환율을 유지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결국 1992년 영국은 환율메커니즘을 탈퇴하였으며 이탈리아는 일시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비슷한 처지의 스페인의 페세타, 포르투갈의 에스쿠도, 아일랜드 파운드가 평가절하되었다.

자칫하면 무산될 수 있었던 통화통합의 구상은 가맹국들의 의지로 인해 명맥이 유지되었다. 독일은 마르크화 포기 약속을 지키며 금리를 가급적 낮게 조정하였고, 프랑스도 마르크화에 맞춰 프랑의 강세와 긴축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환율 변동폭 규정을 지켜냈다. 93년에 또다시 투기세력의 공격이 시작되자 환율 메커니즘 규정이 ±15%로 완화되었다.

유럽연합의 출범과 유로화의 미래

한편 90년대의 세계적 장기 호황은 무산될 뻔했던 유럽통합을 다시 가능하게끔 하는 절호의 기회를 조성했다.

총생산의 증가로 세수가 증가하며 EU회원국 중 상당수가 엄격한 마스트리히트 지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11개국이 유로 통합 대상 국가에 포함되었다. 당시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그리스는 2001년에 가입이 허용되었고, 동유럽 국가들이 유로존에 합류해 현재 21개국에 달하고 있다.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은 통화정책의 자주권을 중시하여 유로 통합에 합류하지 않았다.

유로의 등장으로 국제 통화질서가 달러에서 유로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는 건재했다. 유로는 마르크와 파운드의 지위를 물려받아 준비자산의 20%를 점유했는데, 그 가치 안정성으로 인해 비중이 점차 확대되었다. 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인해 다양한 국제통화가 공존하는 시대가 찾아온 것이다.

1999년 1월 1일부로 금융시장에 유로가 등장하여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실물통화는 2002년부터 도입돼 각국의 통화를 완전히 대체하였다. 유로의 도입으로 참여국들은 통화 교환에 수반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사용의 편리, 상거래와 재화시장의 확대 그리고 채권시장의 확대로 자금조달비용 하락과 같은 이익을 누렸다. 남유럽 국가들은 국채를 독일에 가깝게 저렴한 금리로 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정부부채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흔히 단일통화 및 자본 이동의 자유화는 '자본이 풍부한(즉,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낮은) 국가에서 자본이 부족한 국가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양측의 생산성과 생활수준이 수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금공급이 주로 과잉소비와 부동산 버블 형성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유로를 검증의 시험대 위에 올린 사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해 직접적으로 손실을 입은 유럽계 투자은행들도 있었지만, 세



계 교역량의 축소와 총생산 및 조세수입 감소도 중대하게 작용했다.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자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로 인한 은행위기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채가 기록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나머지 유로존 국가들도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 악화를 겪었다. 이때 ECB는 구제금융 금지 및 정부 재정 직접지원 금지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초입에서 취약국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조기에 종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심각해지자, ECB는 방침을 변경해 유통시장에서 취약국 채권을 매입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그러나 EU 구제금융기구의 최대 출자국인 독일 입장에서는 '방만하게 돈을 사용한 남유럽을 돕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여론이 강했고, 이에 따라 긴축적인 재정정책 요구가 뒤따랐다. 그로 인해 남유럽 경제는 위기는 넘겼지만 장기간의 성장둔화 및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다.

현재의 유럽은 유로존 붕괴 위험에서는 벗어났지만, 낮은 잠재성장률과 높은 청년 실업률, 그리고 높은 GDP 대비 부채비율(프랑스 약 118%, 이탈리아 약 138%)이라는 상흔이 남아있다. 단일통화라는 경제 실험은 '국가별 경제 안정화를 위한 수단이 재정정책뿐이며, 그것조차도 구성원 간의 정치적 문제로 인해 제약받는다'는 씁쓸한 교훈과 함께 '통합을 위해서는 재정 불균형에 대한 안정장치와 위험의 공동부담에 대한 정치·외교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겼다.

1분이 만드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 숏폼 드라마의 경제학과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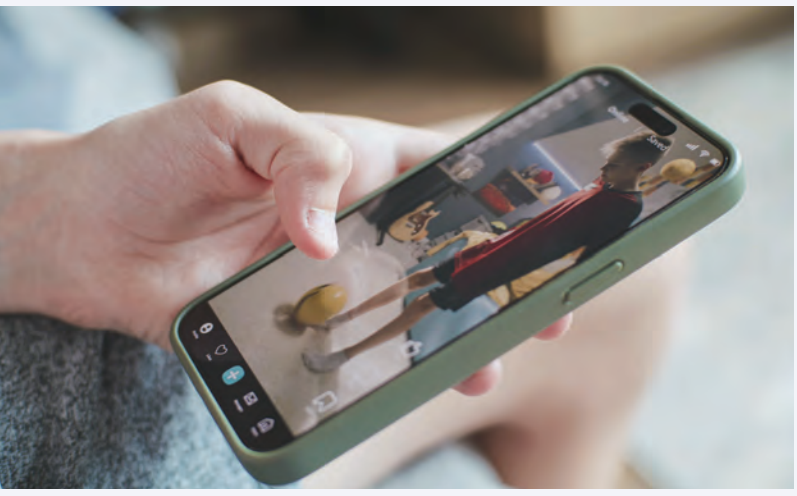
© Robert Way / Shutterstock.com

글. 김치호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분 안에 지갑을 여는 ‘도파민 경제’의 작동 원리

지난 세 번째호에서는 무형의 원천 IP가 플랫폼을 거치며 어떻게 생애 주기를 연장하고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그 확산 장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숏폼 드라마’의 산업적 실체에 주목하고자 한다. 회당 1~2분 내외, 50~80부작으로 완결되는 세로형 숏폼 드라마는 스마트폰 이용 습관에 최적화된 새로운 영상 문법이다.

이 콘텐츠가 대중문화 시장에서 ‘도파민 경제(Dopamine Economy)’로 명명되는 이유는 명확하다. 짧은 시간 안에 배신, 복수, 출생의 비밀, 신분 상승과 같은 고자극 갈등을 집약적으로 밀어 넣고, 회차 말미에는 위기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 화면을 끊는 ‘클리프행어(절단마공)’ 기법을 배치한다. 시청자는 극대화된 심리적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된다. 무료 티저 구간 이후 다음 회차를 열기 위해 소액을 지속적으로 지불하게 만드는 ‘마이크로 페이먼트(Micro-payment)’ 구조는 시청자의 즉각적인 감정 보상 욕구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고효율의 수익 장치다.



중국의 거대 산업 클러스터와 커머스 연계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발원지인 중국에서 숏폼 드라마는 이미 전통 미디어의 규모를 위협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숏폼 드라마 시장 규모는 약 69억달러(약 9조원)에 달하며 자국 영화 박스오피스마저 추월했다. 폭발하는 제작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허난성 정저우시와 저장성 진화시 등은 대규모 전용 세트장과 스튜디오를 갖춘 숏폼 드라마 제작 특구로 변모하여, 일종의 공장형 분업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를 매일 쏟아내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더 눈여겨볼 대목은 플랫폼과 유통망의 결합 방식이다. 대표 숏폼 플랫폼인 도우인(Douyin)과 콰이쇼우(Kuaishou) 등은 단순한 회당 결제 모델에 머물지 않고 이커머스(E-commerce) 시스템을 긴밀하게 결합했다. 드라마 시청 화면 속에서 여주인공이 착용한 의류, 액세서리, 화장품이 하단 링크를 통해 즉각적인 실물 구매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다. 콘텐츠 소비가 곧바로 제조업 및 유통·소비로 전이되는 거대한 실물 경제 생태계가 정착된 셈이다.

미국 시장의 8,000% 폭발적 성장과 장르 다변화

중국에서 검증된 숏폼 생태계는 북미 시장으로 옮겨붙으며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국의 숏폼 드라마 시장은 2023년 1분기 180만달러에서 2024년 1분기 1억 4,600만달러로 무려 8,000% 이상 폭증했다. 전통 TV 시리즈나 장편 OTT 파일럿 제작비가 수백만달러에 달한 반면, 북미 숏폼 드라마는 15만~25만달러 선의 비교적 낮은 예산으로 제작되어 높

은 자본 회수율을 보여준다.

초기 시장은 18~34세 여성을 겨냥한 늑대인간 판타지나 재벌 로맨스 등 자극적인 클리셰 중심이었다. 릴숏(ReelShort)의 히트작 〈억만장자 남편의 이중생활〉이 2억 7,000만뷰 이상을 달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장이 팽창하면서 장르의 분화와 타깃 세분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드라마박스(DramaBox)는 남성 시청자 비중을 43.5%까지 끌어올리며 액션·스릴러 장르로 영역을 확장했고, 굿숏(GoodShort)은 SF와 호러, 일본 시장을 겨냥한 톱쇼트(TopShort)는 애니메이션 스타일, 플렉스TV(FlexTV)는 이용자가 선택지를 고르는 인터랙티브 드라마를 시도하며 저변을 넓히고 있다.



억만장자 남편의 이중생활 ⓒ Crazy Maple Studio™, Inc.

국내 시장의 현주소와 명암: 비글루의 도전과 마케팅 딜레마

한국 역시 숏폼 드라마 앱 매출 규모에서 세계 4위를 기록할 만큼 시장 반응이 뜨겁다. 스푼랩스가 출시한 '비글루(Vigloo)'는 대형 게임사 크래프톤으로부터 누적 1,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토종 플랫폼의 대표주자로 부상했다. 또한 국내 숏폼 플랫폼 '탑릴스'가 약 22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미국 상장사에 매각되는 등, K-콘텐츠의 연출력과 IP 기획력은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적 성장 이면에는 숏폼 산업 특유의 구조적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회당 수백원의 결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외부 소셜미디어에서 새로운 이용자를 유입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케팅(UA, 이용자 획득) 비용이 총비용의 50%를 상회하면서, '매출은 늘어나는데 적자 폭은 오히려 커지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다. 플랫폼들이 이용자 유지율(Retention)을 안정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천문학적인 외부 광고비 출혈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AI 기술 혁신을 통한 생태계 고도화

이러한 마케팅 비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작 현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 창작자의 직관에만 의존하던 기획 단계에서 벗어나, AI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시청자의 이탈 시점, 클릭률, 선호 서사 패턴을 실시간 분석하여 시나리오의 흥행 실패 확률을 낮추고 있다.

더불어 버추얼 프로덕션(가상 스튜디오)과 AI 기반

자동 편집 도구는 세트 제작비와 후반 작업 공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제작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고도화된 AI 번역 및 음성 복제(더빙) 기술은 언어적 장벽을 단 며칠 만에 허물어, 국내에서 제작된 숏폼 드라마가 글로벌 다국어 시장에 실시간으로 동시 유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정책 과제

숏폼 드라마는 더 이상 스낵 컬처의 하위 범주가 아니다. 모바일 중심 소비 환경에서 글로벌 자본이 격돌하는 독립적인 산업 생태계다. 따라서 국가 재정 및 공공 정책의 프레임워크 역시 단순한 단편 제작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밸류체인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중소 제작사와 플랫폼의 과도한 마케팅 출혈을 완화할 공공 유통 및 해외 마케팅 지원 펀드가 긴요하다. 현재 숏폼 생태계는 글로벌 이용자 유치 비용이 제작비보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 모태펀드 내에 글로벌 진출 목적의 마케팅 특화 계정을 신설하여, 우수한 원천 IP를 보유한 국내 제작사가 해외 플랫폼 입점 초기 단계에서 겪는 마케팅 비용 장벽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원천 웹툰·웹소설 IP의 숏폼 드라마 리미디에이션(Remediation)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미 시장에서 흥행성과 팬덤이 검증된 풍부한 K-스토리 자산을 숏폼 포맷으로 신속하게 영상화할 수 있도록 IP 보유사와 제작사 간 매칭 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는 기획 단계의 리스크를 줄이고 흥행 타격률을 높이는 안전장치가 된다.

셋째, 생성형 AI 기반 제작 인프라에 대한 전략적 예산 투입이 요구된다. 중소 창작 스튜디오가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AI 번역, 현지화 더빙, 버추얼 스튜디오 인프라를 공공 클러스터 형태로 구축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글로벌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제작 단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비글루 웹페이지 캡처, 《지독한 사랑에 빠지다》, ⓒ Spoon Labs Inc., 접속일 2026. 9. 30.

넷째, 숏폼 콘텐츠에 부합하는 공정한 계약 기준과 저작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회당 초단기 결제와 복잡한 정산 구조 속에서 신진 작가와 제작진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무단 복제 클립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숏폼 드라마는 대중의 짧아진 주의력을 기민하게 포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현장이다. 단기적인 흥행성 자극에 매몰되지 않고, 데이터와 AI 기술,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 IP가 결합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의 정교하고 선제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www.nabo.go.kr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www.youtube.com/@nabokorea



[읽어주는 NABO 보고서]
ESG 공시 누가 왜 할까?
ESG 공시 사각지대는?



[읽어주는 NABO 보고서]
현재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상황은?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 / 문 / 공 / 모

논문 공모 상시모집 　　**투고 자격** 석사과정 이상

발간일 03.20 | 06.20 | 09.20 | 12.20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제출방법 nabo.jams.or.kr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문의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회 (02-6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NABO와 함께 즐기는 독자 참여 이벤트

NABO 재정퀴즈

1. ESG 공시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2026년 7월 8일 발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에 따르면, 2028년(FY2027)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ESG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은 연결자산 총액이 얼마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일까요?

※ 힌트: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 [읽어주는 NABO 보고서] ESG 공시 누가 왜 할까? ESG 공시 사각지대는?

① 5조원 이상 ② 10조원 이상 ③ 20조원 이상 ④ 30조원 이상

2. 정부는 농산물 유통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지·도매·소매 단계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일부를 관련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기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투입된 예산 규모는 약 얼마일까요?

※ 힌트: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 [읽어주는 NABO 보고서]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상황은?

① 4,000억원 ② 6,000억원 ③ 8,000억원 ④ 1조원 이상

3.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을 통해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을 고려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우리나라 2027년 실질GDP 성장률은 얼마일까요?

※ 힌트: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 2027년 NABO 경제전망: 2026~2030 기자회견

① 2.2% ② 2.3% ③ 2.7% ④ 3.5%

※ 매달 NABO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NABO 재정퀴즈가 진행됩니다.
이번 호는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재정 퀴즈 문제입니다.

2026년 예산춘추의 독자 퀴즈는 **'재정퀴즈'**와 **'초성퀴즈'**로 진행됩니다.
재정에 관한 퀴즈와 초성퀴즈를 풀어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재정퀴즈'와 '초성퀴즈' 모두 맞힌 정답자를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예산춘추 **초성퀴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회계연도가 끝난 뒤, 실제로 거둬들인 세입에서 지출한 세출을 빼고, 다음 연도로 넘겨 쓸 이월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법에 따라 교부금 정산이나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이거나 다음 연도의 재원이 되는 이 재정 용어는 무엇일까요?

※ 힌트: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경제 용어 사전(108페이지)

초성 Hint

ㅅ	ㄱ	ㅇ	ㅇ	ㄱ

참여방법

- **이메일 접수** tobo2701@naver.com
- **문의** NABO 기획예산담당관실 02-6788-4619
- **독자퀴즈 응모 기간** 2026년 11월 1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

※ 선물 수령(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꼭 적어주세요.

www.nabo.go.kr

2026년 예산춘추 만족도 조사 실시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춘추」 독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래 QR코드를 통해 2026년 「예산춘추」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유익하고 알찬 지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설문 응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응모 기간 2026년 11월 1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

1등 아이패드(1명) 2등 음료 쿠폰(50명)

NABO

ISSN 1739-5542 발간등록번호 31-9700485-001580-08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www.nabo.go.kr

nabo STATS
www.nabostats.go.kr

예산정책연구
nabo.jams.or.kr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
www.youtube.com/@nabokorea